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 방안』 최종보고서

2022.12

한국국제경제학회

연구책임자 : 김홍기(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 구 원 : 임소정(한남대학교 대학원)

〈요약문〉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 소상공인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특히 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된 부채로,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인한 금리상승과 양적긴축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소상공인들의 자금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등의 증대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음
- ☐ 코로나 위기 이후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자금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2) 연구의 목적

- ☐ 코로나 이후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금융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석함
- ☐ 기존 민간금융의 신용공급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지원방식 확대 방안을 제시함
- ☐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도록 융자만이 아니라 투자 등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2. 연구의 범위

☐ 본 제안서의 연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① 소상공인 경영환경 분석
- ② 소상공인 금융환경 분석
- ③ 포용금융과 소상공인정책자금
- ④ 포용적 소상공인금융정책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함

- ① 소상공인 경영환경 현황 및 변화 추이
- ②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 소상공인의 금융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함

- ① 소상공인 금융의 특성
- ②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 ③ 잠재 한계 소상공인

☐ 포용금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봄

- ① 포용금융과 소상공인 금융
-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현황

☐ 포용형 소상공인 금융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함

- ① 소상공인 금융의 디지털화
- ② 소상공인 금융 정보 플랫폼
- ③ 새로운 금융상품
- ④ 민간금융 구인 방안
- ⑤ 소상공인 금융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직접대출

II. 코로나 이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1. 인구 및 유통환경의 변화

1) 고령화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

☐ 고령화 인구 증가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
- 30대 이하 가구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증가하여 2016년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됨

2) 주력소비세대의 변화

☐ 주력 소비세대가 1인 가구와 MZ세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구조는 기존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2021년 5월 기준 전국 약 2,320만 세대 중 1인 세대는 약 920만 세대로 전체의 39.6%를 차지함
- 2인 세대는 약 550만 세대이고 3인 세대는 400만 세대로 각각 전체의 23.6%, 17.2%를 차지함

- ☐ 조혜정(2022)은 1인 가구의 소비특징으로 ①온라인 간편 결제 선호, ②요식업 소비비중이 높음, ③가성비 등 합리적 소비 중시, ④SNS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공유 활발 등을 지적하고 있음

3)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 디지털기술 발전은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이용의 증대로 결제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간편결제 이용이 기존 결제방식인 카드와 현금 결제를 대신함
- ☐ 금융결제 기술 발전으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며 모바일 거래 채널 확대에 기여하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됨

4) 비대면 거래 활성화

- ☐ 국경폐쇄, 외출제한, 전국적 이동금지 등의 각종 조치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을 통한 경제보다는 비대면 경제가 더욱 활발해짐
- ☐ 1인 가구의 증가, 주력소비 세대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2. 통화정책 정상화

- ☐ 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으로 미 연준은 2021년 11월부터 테이퍼링(자산 축소매입)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3월 17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big step(0.5%p)과 giant step(0.75%p)을 반복하고 2022년 12월 말 현재 4.5%에 달하고 있음
-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도 2021년 8월과 11월, 2022년 1월 기준금리를 0.25%p 세차례 인상하여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2022년 12월 현재 3.25%를 기록하고 있음
- ☐ 최근의 가파른 국내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및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2022년 9월에는 3년간 만기연장을 확대함
- ☐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 차주의 이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규모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3. 소상공인 경영실태

- ☐ 여기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실태는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의 2020년 자료를 이용함

- ☐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은 228백만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20백만원임
 - 소상공인 사업실적 중 연평균 매출액은 228백만원, 연평균 영업비용은 208백만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20백만원으로 나타남
- ☐ 부채 보유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59.4%이고 이들이 보유한 평균 부채액은 162백만원으로 조사됨

Ⅲ. 소상공인 금융의 현황과 특징

1. 소상공인 금융 현황

- ☐ 소상공인은 경영상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영상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매출 감소’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금 조달’(27.4%)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 창업과정 시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남(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 사업체 창업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정부 융자 및 보증이 다음으로 많고 ‘개인간 차용’이 3위임

2. 자영업자 대출 현황

- ☐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분기부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1년 3/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87.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하였음

- 2021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5조원이며,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579.3조원(65.3%), 개인사업자 가계대출은 308.2조원임(34.7%)
-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상반기 기준 다중채무자의 수는 140.6만명에 이르고 대출잔액은 68.7조원에 이름(한국은행, 2021)
- 비은행권과 저소득층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2021년 3분기 은행권 대출은 578.1조원으로 동기 대비 11.3%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309.5조원으로 19.8% 증가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과 부진한 소득개선 흐름, 취약한 부채구조 등을 보임

3. 개인사업자의 대출 및 연체율

- 통계청은 매년 개인사업자의 부채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2022년에 통계청이 발행한 자료를 참조하여 2021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부채상황을 검토함
 - 개인사업자의 부채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포함함
- 2021년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7,805만원으로 전년(1억6,830만원)보다 5.8%(975만원) 증가함
 - 대출 용도별로는 사업자대출이 9,117만원이고 가계대출이 8,688만원으로 사업자대출이 많아졌음

- 사업자대출의 증가율(10.1%)이 가계대출의 증가율(2.7%)보다 높고 비은행 대출(10.3%)이 은행대출(3.0%)보다 증가율이 높았음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종사자가 없는 사업체가 종사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높음

-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0.10%, 종사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0.32%임

4. 자영업 대출의 부실위험규모

☐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대 등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세가 제약됨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2)에 따르면 영업자대출은 2022년 3/4분기 말 현재 1,014.2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 유지

☐ 정상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2021년 2/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고, 가계대출 기관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정의함

- 2022년 3/4분기 중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18.7%(전년동기대비)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13.8%)을 크게 상회함

☐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3/4분기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8.7%로 은행(6.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임
- 금리 및 성장률 충격 발생시 비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9%까지,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금융지원 정책효과가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취약차주의 경우 15.0 ~ 17.1조원, 비취약차주의 경우 16.1 ~ 19.7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5.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추정

-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 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 수는 24만 9,342개이며, 그 비중은 39.5%임
- 부실에 진입한 후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임
- 정상인 경우와 부실인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과 부채액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정상인 경우 연평균 매출액은 약 2.35억원인 반면, 부실인 경우에는 1억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남
 - 부채액은 정상인 경우 약 0.97억원인 반면, 한 분기에만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채액은 약 2.16억원으로 높으며 부실이 연속될 경우 부채액은 더욱 증가함

- 이는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함

□ 2022년 12월 현재 기준금리가 3.5%에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의 결과로,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6%이며, 영업이익이 5% 감소 시 약 19%로 추정됨(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

-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8만 5,010개,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 2,790개로 추정됨

6. 소상공인 금융의 특징

□ 소상공인은 경영자원이 취약할 뿐 아니라 재무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 금융은 여타 금융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높은 위험인식, 담보 부족 등으로 요약됨

□ 소상공인 금융시장에는 많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

- 소상공인 대출은 자금 수요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다른 대출에 비해 높음
-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불확실성이 커,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됨

1) 소액대출에 따른 높은 비용

☐ 소상공인 금융은 단위당 대출관리비용이 큼

- 관리비용에는 정보수집비용과 분석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이 들고 소상공인에 대한 분석기법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 정보 분석에 많은 비용이 수반됨

2) 높은 위험인식

☐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함

- 소상공인들의 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고 인식함
-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업력이 매우 짧고 생계위주형의 사업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종이 대부분을 이룸
- 경영능력이나 적절한 회계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못해 상환능력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신뢰도가 떨어짐

3) 담보부족

☐ 소상공인들은 담보물이 부족한데,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특별히 담보물로 제공할 부동산이나 동산이 부족함

- 많은 금융기관들이 담보물을 현금화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정확한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Ⅳ. 포용금융과 소상공인정책금융

1. 포용금융과 소상공인금융

□ 포용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함

- 박창균(2015)은 금융포용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으로 보장된 상태” 정도로 규정함
- 노형식·이순호(2014)는 금융포용을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함
- 금융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접근(effective access)이란 거래가격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자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함

□ 포용금융의 확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킴

- 저소득층의 은행계좌 보유가 저축률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
- 금융포용의 확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시킴
- 포용금융의 확대가 빈곤 축소에 장기적으로 기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금융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경기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전반의 건전성을 개선시킴

- 포용금융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소득불평등 완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를 위한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상공인 금융은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의 한 부문으로 포용금융의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금융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2.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현황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표

- 소상공인 금융이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한 신용보증, 직·간접대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함
- 소상공인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실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
 -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시장 개입이 시장을 압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보완하는 것임
- 소상공인 금융정책은 크게 소상공인의 자금가용성(availability) 확대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용보증, (직접)대출,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이 수행됨

2)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 ☐ 소상공인 금융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융자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보증지원(신용보증)으로 분류됨
-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스마트소상공인전용자금, 그리고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방식은 공단에서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직접대출과 은행 등을 통하여 취급하는 대리대출 방식이 있음
-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공방식에 따라 소상공인이 직접 취급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 취급하는 대리대출로 구분됨
- ☐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체 금융전산시스템(OLS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하여 직접 심사, 약정 및 지급하는 대출임
- ☐ 대리대출은 공단이 ①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②지역신보가 보증서 발행 후, ③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또는 소상공인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대출임

V. 포용형 소상공인 정책금융 혁신방안

1. 소상공인 금융의 디지털화

- ☐ 소상공인 금융 업무 프로세스는 표준화, 단순화, 그리고 디지털화 수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짐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 금융기관마다 프로세스가 상이하고 각종 자료가 디지털화가 미비하여 업무의 중복이나 효율성이 떨어짐
- 정책금융기관 고객정보의 DB화에 대한 표준이나 이를 활용한 각종 지표로의 활용 및 정책금융 기관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활용 계획 등도 미흡한 수준임
-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업무프로세스를 단순화, 표준화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채널의 디지털화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전 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의 간소화, 표준화 및 디지털화가 필요
 - 스위스의 사업자 종합 지원 플랫폼은 접수채널을 일원화하고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공급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음

2. 소상공인 금융 정보 플랫폼 구축

- 현재 소상공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는데 이들 간에 금융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금융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정책금융기관이 서로 생산 보유한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정보 제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선정 대상의 효과성을 제고함
 -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금융지원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업재무정보, 금융기관, 국세청 등의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활용 극대화

- 소상공인 경기상황을 지자체·업종별·기업별로 파악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중앙정부·지자체·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공유하여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책설계·집행 지원함
- 소상공인 현장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현장상황을 공유하도록 함

3.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

- 금융기관과 소상공인간의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오랜 기간 비공식적 정보를 통한 관계형 금융이 매우 중요함
 - 관계형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조달 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금융권의 심사역량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금융기관간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조차 주거래 은행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오랜 기간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의 연성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소상공인의 금융수요를 적기에 충족해주는 등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주거래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 지역서민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에서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관계형 금융은 노동집약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 등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나아가 지역은행 등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정책금융기관에서도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4. 민간금융 구인 방안

- 민간 상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협조융자방식 도입을 통해 일반지원자금의 공급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함
- 민간상업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이를 민간은행이 운영하도록 함
 - 민간은행자금을 소상공인 자금으로 유인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민간은행이 공동자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의 출연 자금과 민간은행 출연자금의 수익률을 달리하도록 디자인

-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보다는 높지만 일반 은행자금보다는 낮아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은행이 보다 많은 자금을 소상공인자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민간자금을 구인하는 효과가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 이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은행의 출연을 1:1로 하고 출연하는 각각의 금리가 3%, 5%이라고 가정하고 각각 5,000억원을 출연하는 경우 이 공동자금의 대출금리는 4%가 되어 은행의 출연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소상공인 자금 공급도 5,000억원이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함

5.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신용보증기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시 보증 지원
 - 어음보험과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손실우선변제나 수익배분비율의 조정을 통한 민간투자 유인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에 대한 투자 촉진
 - 민간이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상권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매칭투자하고 손실을 먼저 정부의 매칭자금이 부담하게 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

- 민간이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경우 민간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

6. 창업 및 초기 소상공인 중심의 직접대출

- 직접대출은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차입자에게 대출하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타깃을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선정하여 대출할 수 있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직접대출은 초기 및 창업 소상공인이나 신규로 용자를 받는 소상공인 등 일반금융기관이 자금공급을 꺼리는 부문으로 제한하여 직접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접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회수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대출 접근성에 있어 신규대출은 어렵지만 이후 유지는 쉬운 구조로 평가받고 있음
 - 직접대출은 자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신규대출이나 창업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 지불 없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고신용자에 대한 직접대출은 축소하고, 금융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자금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직접대출을 확대하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용자 대상 신용등급을 일정 등급 이하로 제한하거나 혹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거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신용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금리자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 소상공인은 가능한 한 배제할 필요가 있음

7. 소상공인 금융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 ☐ 소상공인 금융정책기관은 신용위험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판별하는데 있어 개인보다 잘 조직화되어 역선택의 문제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대출받은 차입자를 잘 감시해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해야 함
- ☐ 소상공인에 대한 심사능력과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이 요구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3
II. 코로나 이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5
1. 인구구조 및 유통환경의 변화	5
1) 고령화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	5
2) 주력 소비세대의 변화	6
3)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7
4) 비대면 거래 활성화	7
2.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고금리 정책	8
3. 소상공인 경영실태	14
III. 소상공인 금융의 현황과 특징	20
1. 소상공인 금융 현황	20
2. 자영업자 대출 현황	26
3. 개인사업자의 대출 및 연체율	32
4. 자영업 대출의 부실위험규모	42
5.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추정	45
6. 소상공인 금융의 특징	50
1) 정보의 비대칭성	50
2) 소액대출에 따른 높은 비용	52
3) 높은 위험인식	53
4) 담보부족	54

IV. 포용금융과 소상공인정책자금	55
1. 포용금융과 소상공인금융	55
1) 포용금융의 정의 및 효과	55
2) 소상공인금융의 확대와 포용금융	58
2.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현황	59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표	60
2)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61
3) 소상공인정책자금 추이	64
V. 포용형 소상공인금융 혁신방안	66
1. 소상공인 금융의 디지털화	66
2. 소상공인 금융 정보 플랫폼 구축	67
3.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	69
4. 민간금융 구인 방안(협조융자)	71
1) 협조융자	71
2) 상업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공동자금 운영	72
5.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73
6. 창업 및 초기 소상공인 중심의 직접대출	76
7. 소상공인 금융지원 역량강화	78
참고문헌	79

〈표 목차〉

〈표2-1〉 코로나 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실적	13
〈표3-1〉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 '21.10월)	30
〈표3-2〉 개인사업자의 용도 및 금융기관별 대출	32
〈표3-3〉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34
〈표3-4〉 연령별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35
〈표3-5〉 매출액별 평균 대출 및 연체율	36
〈표3-6〉 대출잔액별 평균대출 구성비 및 연체율	42

〈표3-7〉 정상 및 부실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과 부채액	46
〈표3-8〉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48
〈표3-9〉 신용등급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48
〈표3-10〉 영업이익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비율	50
〈표4-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유형	62
〈표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이	65

〈그림 목차〉

〈그림2-1〉 미국의 연준금리 동향	10
〈그림2-2〉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15
〈그림2-3〉 현 사업체 운영기간 분포	15
〈그림2-4〉 창업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사항	17
〈그림2-5〉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과 비용	17
〈그림2-6〉 소상공인의 부채 여부와 금액 분포	18
〈그림2-7〉 사업체 운영 애로사항	19
〈그림2-8〉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정부지원사업	19
〈그림3-1〉 경영상 애로사항(중복응답)	20
〈그림3-2〉 창업과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	21
〈그림3-3〉 창업자금조달 방법	22
〈그림3-4〉 2020년 대비 2021년 외부자금조달 전망	22
〈그림3-5〉 신규조달한 자금 규모	23
〈그림3-6〉 신규조달 자금 원천별 비중	23
〈그림3-7〉 비은행금융기관 신규대출 받은 곳(비중)	24
〈그림3-8〉 신규 사채 조달처	25
〈그림3-9〉 은행 신규대출 신청 경험 여부	25
〈그림3-10〉 신규대출 거절 경험 여부	26
〈그림3-11〉 자영업자 대출 현황	27
〈그림3-12〉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	29
〈그림3-13〉 자영업자 DSR	29

〈그림3-14〉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추이	33
〈그림3-15〉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별 연체율 추이	34
〈그림3-16〉 매출액별 대출금액 추이	37
〈그림3-17〉 매출액별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37
〈그림3-18〉 매출액별 연체율	38
〈그림3-19〉 사업기간별 평균대출액	38
〈그림3-20〉 사업기간별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39
〈그림3-21〉 종사자 유무별 평균대출금액	40
〈그림3-22〉 종사자 유무별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40
〈그림3-23〉 대출잔액별 연체율	41
〈그림3-24〉 부실위험률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4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 소상공인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거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 이용하고 있음
 -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1위는 자금조달 40.3%, 2위는 경쟁심화 22.4%, 3위 매출감소 20.7%, 4위 인력확보 10.3% 순으로 지적됨(신보중앙회 「2016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
 - 금리단층으로 인하여 우량신용자와 담보능력이 있는 경우는 1금융권의 저금리를 이용하고 있고, 그 외 중·저신용자는 2, 3금융권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위주의 신용평가 모델로 인하여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 중·저신용자는 10% 내외의 고금리로 대출이 양극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 소상공인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특히 저금리의 위기극복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높아진 상황에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인한 금리상승과 양적긴축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관련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소상공인들의 자금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총량적인 소상공인 자금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수단을 활용한 자금공급의 다양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임
- 정책자금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안정이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
 - 신용등급과 담보보유 여부 등으로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은 정책 목적 달성에 한계를 가짐
 - 소상공인의 성장가능성과 사업역량을 평가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창업 초기기업이나 신규대출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대출 대상을 분명히 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 위기 이후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자금지원을 고민하고 제한된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2) 연구의 목적

- 소상공인 자금조달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금융과 병행할 수 있는 민간 금융의 역할을 키워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을 모색함
 -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의 대체수단으로서 민간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함
 - 정책자금이 민간자금과 경쟁을 한다든지 혹은 구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소상공인 금융으로 crowding-in 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함

- 소상공인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제공 여지를 확대함
 - 그동안 소상공인 금융은 주로 전통적인 대출금융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

2. 연구의 범위

- 본 제안서의 연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① 소상공인 경영환경 분석
 - ② 소상공인 금융환경 분석
 - ③ 포용금융과 소상공인정책자금
 - ④ 포용적 소상공인금융정책
-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석함
 - ① 소상공인 경영환경 현황 및 변화 추이
 - ② 소상공인 경영실태 분석
- 소상공인의 금융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함
 - ① 소상공인 금융의 특성
 - ②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 ③ 잠재 한계 소상공인
- 포용금융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봄
 - ① 포용금융과 소상공인 금융
 -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현황

□ 포용형 소상공인 금융을 위한 혁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함

- ① 소상공인 금융의 디지털화
- ② 소상공인 금융 정보 플랫폼
- ③ 새로운 금융상품
- ④ 민간금융 구인 방안
- ⑤ 소상공인 금융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직접대출

II. 코로나 이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1. 인구구조 및 유통환경의 변화

1) 고령화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

☐ 고령 인구 증가 및 생산연령 인구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음

☐ 고령화로 인한 가구주 연령 고령화도 함께 진행 중임

- 30대 이하 가구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가구주의 비중은 증가하여 2016년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2021년 기준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71.7%이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의 구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됨

2) 주력 소비세대의 변화

- ☐ 주력 소비세대가 1인 가구와 MZ세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가계구조는 기존 4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2021년 5월 기준 전국 약 2,320만 세대 중 1인 세대는 약 920만 세대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인 세대는 약 550만 세대이고 3인 세대는 400만 세대로 각각 전체의 23.6%, 17.2%를 차지함
- ☐ 조혜정(2022)은 1인 가구의 소비특징으로 ①온라인 간편 결제 선호, ②요식업 소비비중이 높음, ③가성비 등 합리적 소비 중시, ④SNS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공유 활발 등을 지적하고 있음
- ☐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으로 구성된 MZ 세대의 부상
 - MZ세대는 물건을 구입하기 전, 구매정보 습득을 위해 포털 사이트를 통한 검색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음
 - 밀레니얼 세대의 약 79%, Z세대의 55.2%가 SNS를 이용함
- ☐ 1인 가구와 MZ세대의 부상으로 인한 소비트렌드와 소비행태의 변화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회를, 변화 없이 전통방식을 고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위협의 요인이 될 것임

3)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가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음
 - 소비자들의 소비활동 역시 스마트폰 사용률 증가와 5G시대 및 모바일 기기 발전을 통한 디지털화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이용의 증대로 결제방식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간편결제 이용이 기존 결제방식인 카드와 현금 결제를 대신하면서 온라인 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 금융결제 기술 발전으로 보안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며 모바일 거래 채널 확대를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고 있음
 - 모바일 기기의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 등과 같은 간편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 절차가 간소해지고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며 디지털 경제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4) 비대면 거래 활성화

- 국경폐쇄, 외출제한, 전국적 이동금지 등의 각종 조치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을 통한 경제보다는 비대면 경제가 더욱 활발해짐
 - 비대면 경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정의되는데 첫 번째는 ‘집 안에서의 소비’와 비대면 실외소비로 구분됨
 - ‘집안에서의 소비’는 과거 실외에서 이루어졌던 고객의 구매 행동이

집 안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이커머스 소비 행태나 제품 배달, 원격 의료 등을 포함

- ‘비대면 실외소비’로 실외에서 하던 구매 행동이 여전히 실외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술 및 서비스 혁신으로 거래가 대면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오프라인 위주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인 가구의 증가, 주력소비 세대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음

-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포장 식료품, 배달 서비스 등으로 온라인 구매가 증대함
-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는 모바일 기기 사용률이 높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소통을 중요시하며, 개인주의 성향을 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소비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끼침
- 코로나19는 각 산업 분야의 비대면 경제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2.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고금리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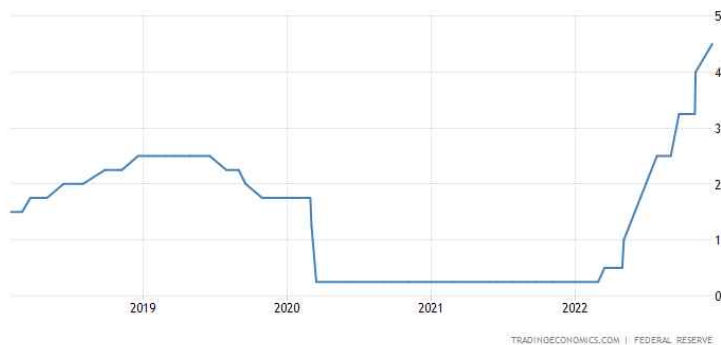
□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발생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극심한 자금경색을 경험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적극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하였음

- 2020년 코로나19로 3월 초중반에 미국과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가 50~60bps나 급등하는 등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MMF(Money Market Fund)에서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함
 -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비전통적 수단을 동원하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함
 - 미국 연준은 2020년 3월 중 기준금리를 1.5%p 인하하여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제로금리에 복귀하였고, 국채 및 주택담보부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의 매입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시행함
- 2021년 들어 백신보급 등으로 미국의 경기반등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자산시장 불균형 및 인플레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미국 경제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백신보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빠른 가파른 회복세를 보여 GDP 성장률이 2020년 중 연간 -3.5%에서 2021년에는 연간 5.6%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저비용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 부동산 가격 등이 빠르게 상승하여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됨
 - 양적완화 정책, 코로나19 보상소비, 대규모 재정부양책 시행,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으로 인플레이 및 기대인플레이가 크게 상승
- *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9.1%(2022년 6월)

- 통화정책 정상화의 과정으로 미 연준은 2021년 11월부터 테이퍼링(자산 축소매입)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3월 17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big step(0.5%p)과 giant step(0.75%p)을 반복해 2022년 12월 말 현재 4.5%에 달하고 있음
- 미 연준은 2021년 중반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여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2022년 이후 급속한 금리인상을 추진함
- 2022년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 인상하였고 6월 이후 3회에 걸친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를 인상하고 12월에는 0.5%를 인상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주고 있음
-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때까지 금리가 인상되어 금리의 상단이 5% 중반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지고 있음

<그림2-1> 미국의 연준금리 동향



-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향후 미국의 장단기금리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며 미국의 영향을 받은 여러 선진국 역시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세계 금리 역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테이퍼링 시작 이전 1.5% 내외에 머물렀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22년 3월 중반에는 2.2%에 근접하였으며 향후 양적축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3%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미연준의 향후 B/S축소는 연준의 현 자산규모가 큰 점, 평균 만기가 짧은 점, 고용 및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과거 2017~2019년 보다 감축 속도를 2배 이상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도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의 견조한 흐름, 소비 회복에 기인한 국내경제의 양호한 회복세와 2% 중반대의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금융불균형 심화 등을 고려하여 2021년 8월 26일과 11월 25일, 2022년 1월 14일 기준금리를 0.25% 세차례 인상하여 통화정책 완화정도 축소를 통하여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월 현재 3.25%를 기록하고 있음
-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존 1.25%이던 기준금리를 2020년 3월 16일과 5월 28일에 각각 0.50%, 0.25% 인하하였으며 그 이후 기준금리는 0.50%의 낮은 수준을 유지
- 기준금리 인상 당시 2021년 경제성장률은 4%대로 예상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과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로 소비자물가로 측정한 기대인플레이션이 2% 중반 이상으로 예측됨
- 최근의 가파른 국내물가 상승률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아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인 2% 초반대로 회복시킬 경우 미국과 금리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4%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외국 자본유출의 증가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함
 - 코로나 19 팬데믹 확산으로 붕괴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세 약화에 따른 보상소비가 증가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22년 2월 3.7%으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가속화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물가의 상승폭으로 확대되어 2022년 물가상승률이 5.1%를 기록하여 통화당국의 기준금리는 향후 인상될 가능성이 큼
- 통화정책 완화 축소기조에 따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특별 공급한 원화유동성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시중의 유동성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
- 코로나 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회사채 · 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증액 등의 수단으로 2021년 말까지 시중에 누적으로 약 73조원을 공급

<표2-1> 코로나 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실적(2021년 말 현재)

구 분	한 도	실적(누적금액)
증권금융 및 증권사 RP매입, 국고채 단순매입,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 등	무제한	39.93조원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8.0조원	3.56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증액	18.0조원	19.2조원
차액결제이행용 납입 담보증권금액 감액	-	10.1조원

자료: 한국은행

□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및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하였으며 1차 시행 종료 후 2022년 9월 말 까지 3차례 기간을 연장하였고 9월에는 다시 만기연장을 3년간 유지하기로 함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 원리금은 291.0조원(116.5만건)으로 만기연장 276.2조원(105.4만건), 원금 상환유예 14.5조원(9.4만건), 이자 상환유예 2,440억원(1.7만건) 지원함
- 2022년 1월 말 현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133.4조원(70.4만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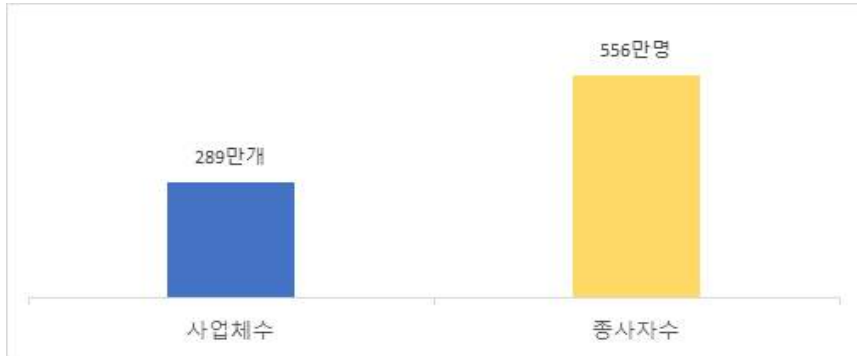
□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 출현,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의 보급,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 누적 등으로 인해 2021년 일시적으로 시도되었던 ‘위드코로나’ 정책이 2022년 다시 시행

- 통화정책의 정상화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 차주의 이자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의 부실규모가 확대되어 보증 및 채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정부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의 금리는 당분간 동결하기로 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등의 특별정책 대출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단기적으로 금리인상의 효과는 약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금리인상 추세가 지속되면 일상회복으로 인한 경기활성화 효과가 매우 커서 소상공인의 재무상태가 크게 호전되지 않는 한 보증 대출의 부실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3. 소상공인 경영실태

- 여기에서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실태는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의 2020년의 자료를 이용함
-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89만개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89만개로 전년대비 12만 개 증가함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91만 개로 가장 많아 전체의 31.5%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숙박·음식점업 71만개(전체의 24.4%), 제조업 37만개(전체의 12.8%) 순임
- 2020년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556만명으로, 전년대비 88만명이 감소함
 - (업종별) 도·소매업 155만명, 숙박·음식점업 132만명, 제조업 110만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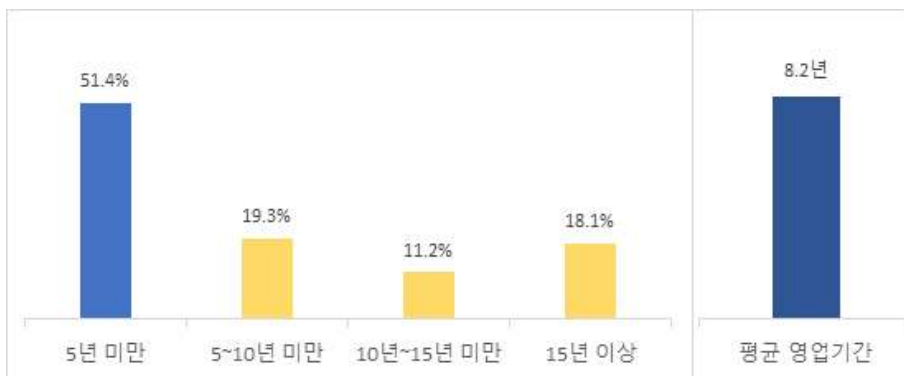
<그림2-2> 소상공인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

- 소상공인의 사업자 형태는 개인사업자 89.4%, 법인사업자 10.6%임
 - 개인사업자는 수리·기타업 99.4%, 법인사업자는 정보통신업 68.0%로 각각 높게 나타남
- 현 사업체의 영업기간은 평균 8.2년이며, 5년 미만 51.4%, 5~10년 미만 19.3%, 15년 이상 18.1%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11.1년, 건설업은 9.3년, 도·소매업 9.2년 순으로 나타남

<그림2-3> 현 사업체 운영기간 분포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

- 소상공인의 창업 횟수는 평균 1.5회로, 1회 62.3%, 2회 29.8%, 3회 4.8%, 4회 1.8% 5회 이상 1.4% 순이며, 평균 창업 횟수는 1.5회로 나타남
 - (업종별) 평균 창업 횟수는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업 1.6회,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업, 교육업, 수리·기타업 1.5회 순으로 나타남
- 현 사업체의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9.6개월이며, 12~24개월 미만 27.3%, 6~12개월 미만 25.7%, 3~6개월 미만 21.1%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건설업, 정보통신업 12.7개월, 제조업 11.5개월 순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의 창업비용은 평균 89백만원이며, 이 중 본인 부담금액은 평균 68백만원
 - (업종별) 평균 창업비용은 예술·스포츠업 146백만원, 전문·과학업 56백만원 순이며,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예술·스포츠업 112백만원, 제조업 88백만원 순으로 나타남
- 창업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사항은 '자금조달'임
 -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느낀 창업 과정의 어려운 정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자금조달 60.0점, 입지선정 52.2점, 경영방법 45.0점 순임

<그림2-4> 창업 과정 중 가장 어려운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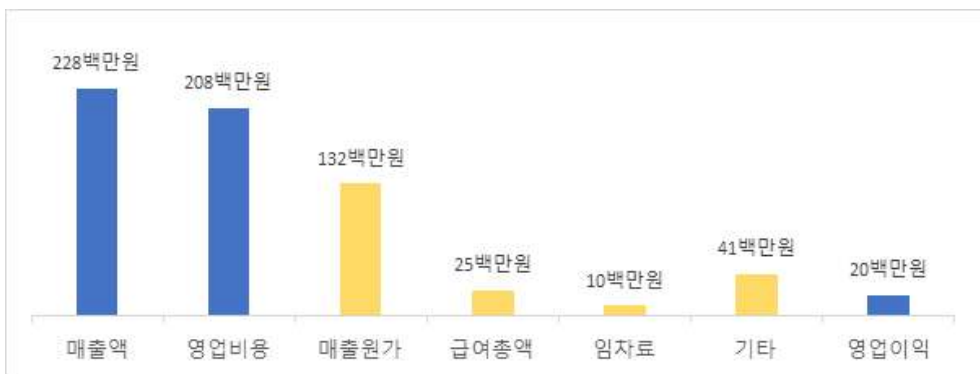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

□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은 228백만원이고, 연평균 영업이익은 20백만원임

○ 소상공인 사업실적 중 연평균 매출액은 228백만원, 연평균 영업비용은 208백만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20백만원으로 조사됨

<그림2-5>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과 비용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

□ 부채 보유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59.4%이고 이들이 보유한 평균 부채액은 162백만원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의 59.4%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부채액은 평균 162백만원으로 나타남

<그림2-6> 소상공인의 부채 여부와 금액 분포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

- 사업체 운영 애로사항으로 38.3%가 ‘경쟁심화’를 들고 있음

- 사업체 운영 시 애로사항은 경쟁심화가 38.3%, 상권쇠퇴가 37.7%, 원재료비가 2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2-7> 사업체 운영 애로사항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

- 소상공인의 74.5%는 정부지원 제도로 자금지원 정책을 희망함

-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은 자금지원 74.5%, 세제지원 54.5%, 판로 지원 16.6% 순임

<그림2-8> 소상공인들이 희망하는 정부지원사업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실태조사(2020)

Ⅲ. 소상공인 금융의 현황과 특징

1. 소상공인 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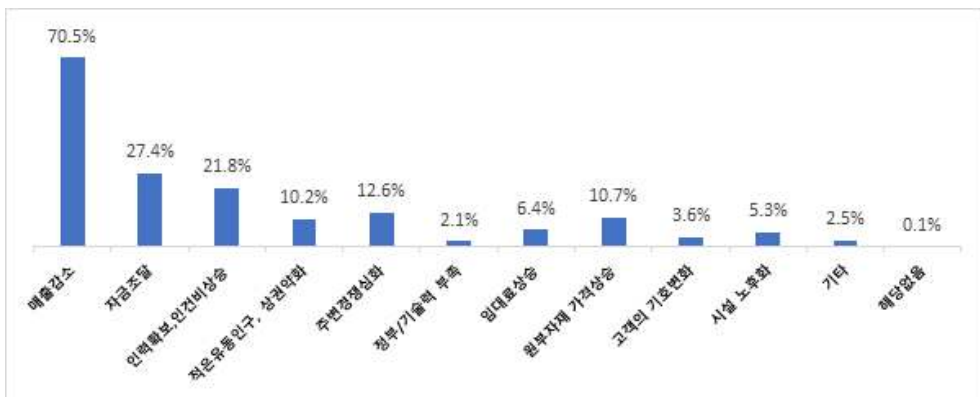
□ Schumpeter(1912)는 경제발전 요소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혁신(결합)을 위한 금융을 들고 있음¹⁾

- 혁신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혁신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외부 금융이 필요함
- 따라서 외부금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함

□ 소상공인은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영상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매출 감소’가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금 조달’(27.4%)이 2위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3-1> 경영상 애로사항(중복응답)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1) 첫째, 발전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 둘째, 발전은 기업가에 의한 새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셋째, 새로운 결합을 이루어내려면 기업가에게 내부자금 이외에 외부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이종욱 외(2018) 참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2017)에 따르면,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쟁심화(25.6%), 매출감소(19.8%), 인력확보(10.0%), 업종쇠퇴(4.0%), 정보/기술력 부족(2.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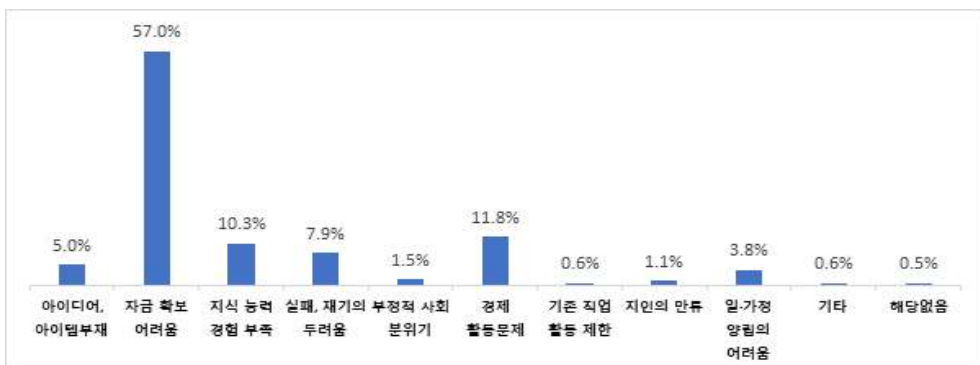
-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연령별로 대부분에서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자금조달이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상장 단계는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창업과정 시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높게 나타남(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 현 사업체 창업 준비 과정 중 어려웠던 점 1순위를 살펴보면, ‘자금 확보 어려움’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3-2> 창업과정 중 가장 큰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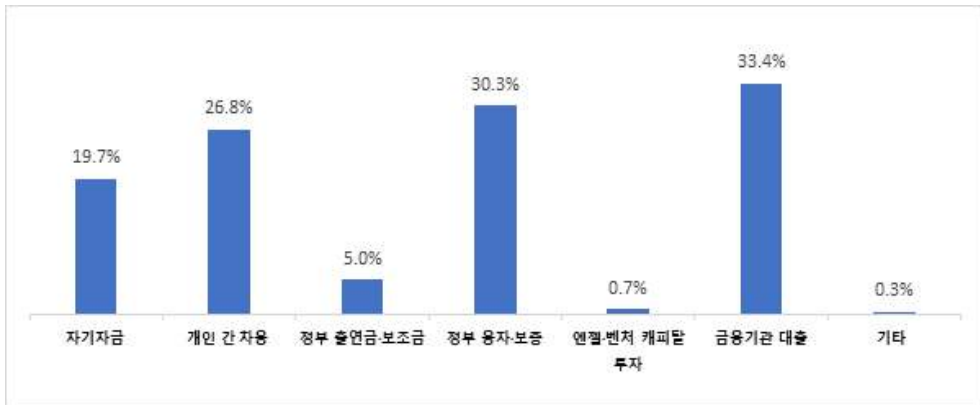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 현 사업체 창업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정부 융자 및 보증’이고 ‘개인간 차용’이 3위의 순임(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 금융기관 대출이 3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부 용자·보증'(30.3%), '개인 간 차용'(26.8%)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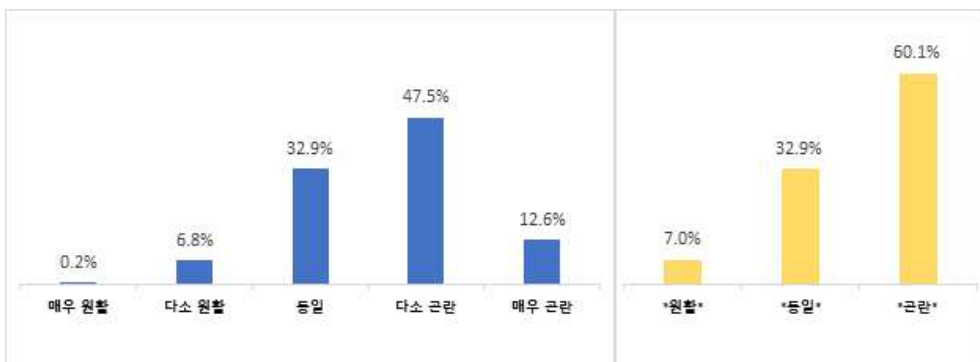
<그림3-3> 창업자금조달 방법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21),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대비 2021년 외부자금조달 전망으로는 '곤란(60.1%)', '동일(32.9%)', '원활(7.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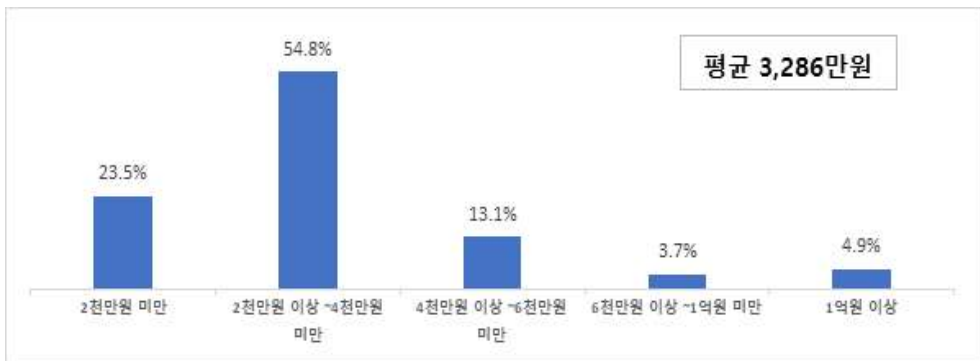
<그림3-4> 2020년 대비 2021년 외부자금조달 전망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 신규조달한 자금 규모는 2021년 평균 3,286만원으로 조사됨
 -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54.8%)’, ‘2천만원 미만(23.5%)’ 순이며, 평균 3,286만원으로 나타남(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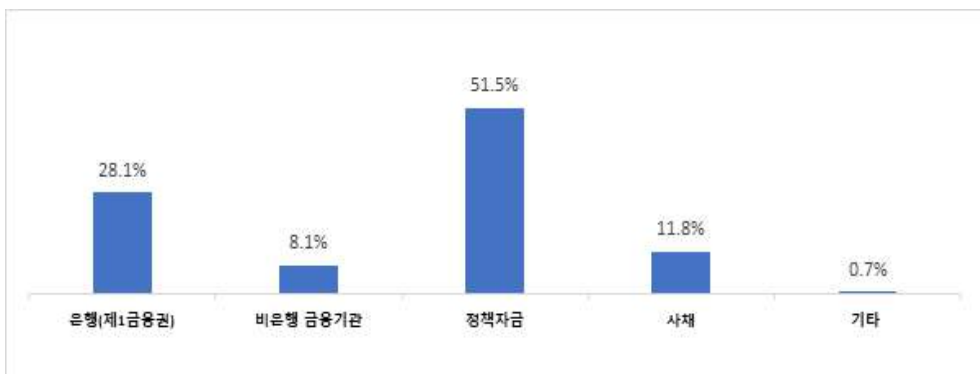
<그림3-5> 신규조달한 자금 규모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 신규 자금조달 원천별 비중으로는 ‘정책자금(51.5%)’, ‘은행(28.1%)’, ‘사채(1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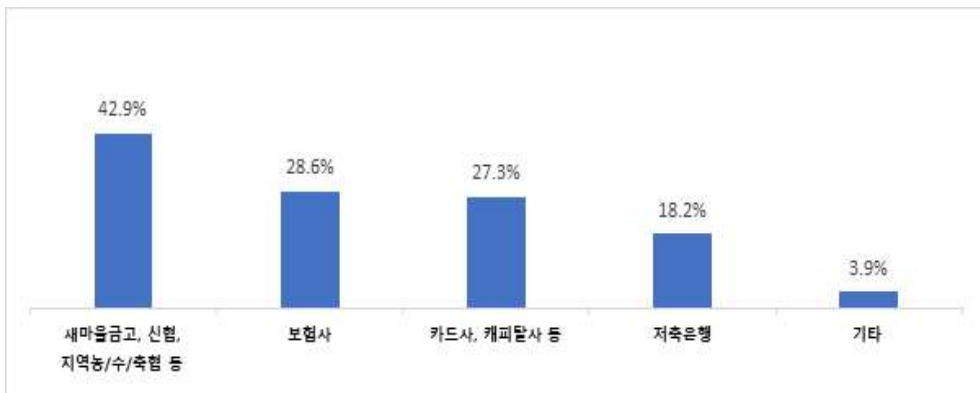
<그림3-6> 신규조달 자금 원천별 비중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 비은행금융기관 신규대출을 많이 받은 금융기관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수/축협 등(42.9%)’, ‘보험사(28.6%)’, ‘카드사, 캐피탈사 등(27.3%)’, ‘저축은행(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비은행금융기관 신규대출은 담보대출 금리 평균 5.1%, 신용대출 금리 평균 7.5%로 나타남
-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이유로는(1순위 기준) ‘은행에 비해 대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서(41.6%)’, 은행이 대출을 거절해서(35.1%)’, ‘급전이 필요해서(1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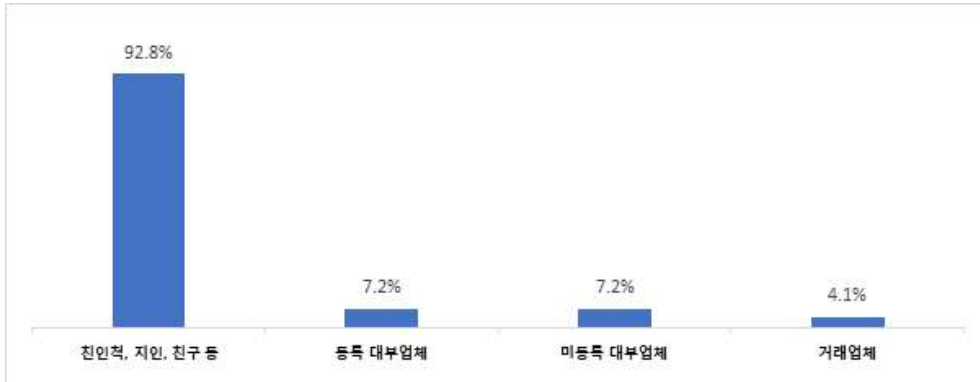
<그림3-7> 비은행금융기관 신규대출 받은 곳(비중)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 신규 사채 조달처로는 ‘친인척, 지인, 친구 등(92.8%)’, ‘등록 대부업체 (7.2%)’, ‘미등록 대부업체 (7.2%)’, ‘거래업체(4.1%)’ 순으로 나타남
- 대출받은 사채의 평균 차입 금리는 7.9%로 나타남
- 사채 조달 이유는 ‘친인척, 지인, 친구 등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해서 (53.6%)’, ‘은행, 제2금융권 대출이 어려워(2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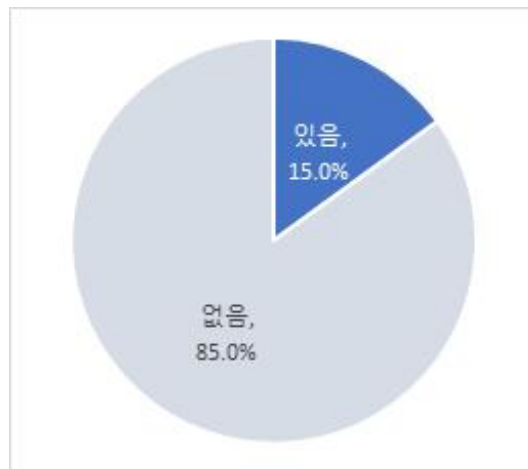
<그림3-8> 신규 사채 조달처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 ☐ 은행 신규대출 신청 경험 여부로는 '경험 없음(85.0%)'이 '경험 있음(15.0%)'보다 크게 높게 나타남

<그림3-9> 은행 신규대출 신청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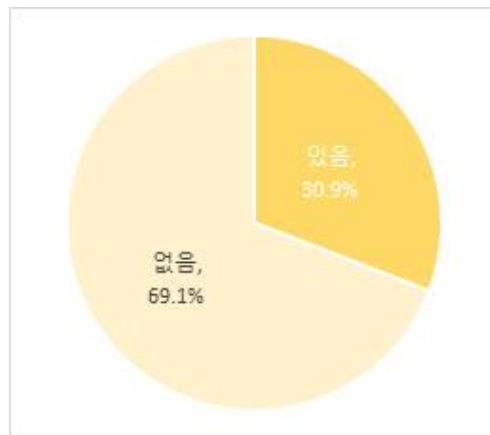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 ☐ 은행 신규대출 신청 경험자 중 신규대출 거절 여부로는 '경험 없음(69.1%)', '경험 있음(30.9%)' 순으로 나타나 신규대출은 기존 대출에 비해 거절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대출 거절한 은행 유형으로는 '시중은행(87.6%)', '특수은행(16.5%)', '지방은행(13.4%)' 순으로 나타남
- 신규대출 거절 사유로는 '담보부족(39.2%)', '신용등급 미달(27.8%)', '대출한도 초과(21.6%)' 순으로 나타남
- 신규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1순위 기준)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43.4%)',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청해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25.5%)', '은행대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자금 조달(23.8%)' 순으로 나타남

<그림3-10> 신규대출 거절 경험 여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1),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

2. 자영업자 대출 현황²⁾

-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분기부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1년 3/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³⁾ 887.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증가하였음

2) 이 절은 한국은행(2021)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의 자료에 의존한 부분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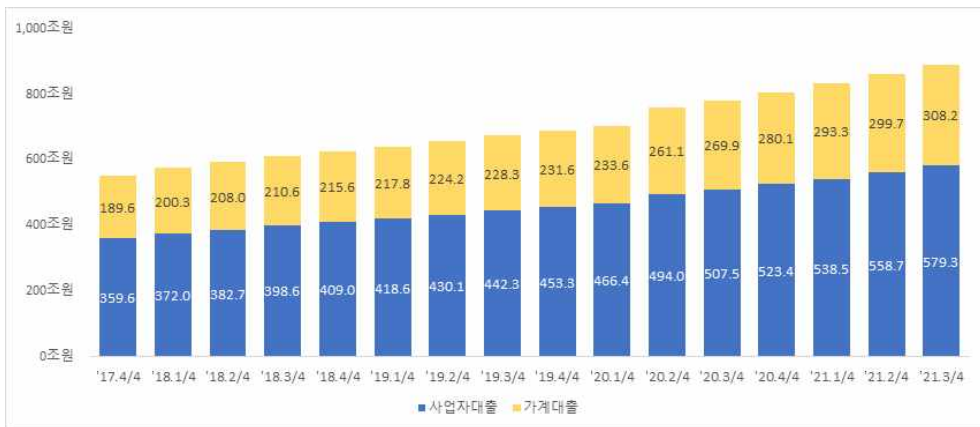
3) 한국은행은 가계부채DB(약 100만 차주로 구성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계하여 자영업자대출 규모로 정의하여 추정함

- 2021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5조원이며,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579.3조원(65.3%), 개인사업자 가게대출은 308.2조원(34.7%)

□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2021년 3분기 기준 257.2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직전 분기인 2019년 4분기 191.4만명보다 65.8만명 증가

-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2019년 3분기 188.2만에서 2020년 3분기 233.5만, 그리고 2021년 3분기 257.2만명으로 증가

<그림3-11>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 중소기업포커스 재인용

□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와 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 상반기 기준 다중채무자의 수는⁴⁾ 140.6만명에 이르고 대출잔액은 68.7조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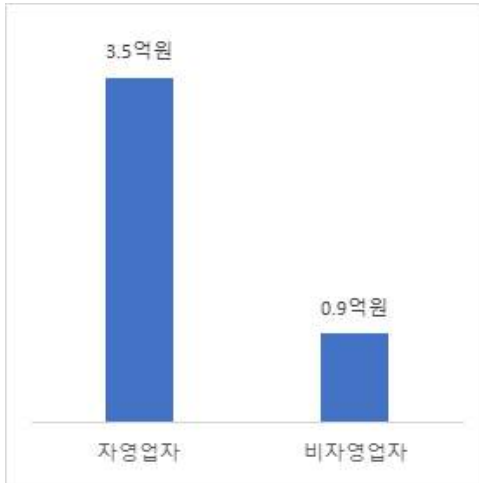
- 한국은행(2021)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다중채무자의 수는 140.6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34만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대출자)의 56.1% 차지하고 있음

4) 자영업 다중채무는 가게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2021년 상반기 589.9조원으로 2019년 상반기 448.1조원 대비 31.6% 증가함
- 비은행권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2021년 3분기 은행권 대출은 578.1조원으로 동기 대비 11.3% 증가한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309.5조원으로 19.8% 증가함
 -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분기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1분위, 3분위, 4분위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고, 영세 업종과 코로나19 타격 업종에 취약 대출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3분기 자영업자 증가율은 18.0%로 비자영업자 11.2% 대비 6.2% 높음
 - 2021년 1분기 업종별 자영업자 취약대출자는 영세 업종인 도·소매, 숙박·음식업과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여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대출자 수 기준 자영업 취약비중은⁵⁾ 도소매 12.3%, 숙박·음식 11.3%, 여가 10.3%를 차지함

5)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자를 말함

<그림3-12>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¹⁾



<그림3-13> 자영업자 DSR²⁾



주1) 2021년 9월말 가계부채DB기준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2021), 자영업자 부채의 잠재위험과 시사점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증가하고 있음

○ 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등으로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보다 대출규모가 훨씬 커, 2021년 9월 말 자영업자의 1인당 대출규모는 3.5억원으로 비자영업자(0.9억원)의 4.0배 수준임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과 부진한 소득개선 흐름, 취약한 부채구조 등을 보이고 있음

○ 자영업자 가구의 원리금 상환비율(DSR)은 37.1%로 비자영업자 가구의 DSR(31.0%)보다 크게 높음

○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69.3%로 임금근로자 등의 비자영업자(55.7%)보다 높고, 이중 주택외 부동산담보대출 비중(29.0%)은 비자영업자(11.7%)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자영업자의 부채구조는 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아 차환 리스크가 높은 것이 특징임

- 2021년 9월 말 현재 자영업자의 일시상환대출 비중(가계대출 기준)은 45.6%로 비자영업자(40.3%)보다 높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중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대출이 69.8%에 달함

□ 2020년 4월~2021년 10월까지 금융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261.2조원을 지원함

- 만기 연장 247.4조원(95.5만건), 원금상환유예 13.6조원(8.6만건), 이자상환 유예 2,301억원(1.7만건)임

<표3-1>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실적('20.4월~'21.10월)

(단위 : 조원, 만건)

구분	만기연장 일시상환		분할상환대출 원금상환유예		분할상환 대출 이자 일시상환유예	
	금액(조원)	건수	금액(조원)	건수	금액(조원)	건수
은행	155.8	64.6	10.7	2.8	847	0.7
정책금융기관	90.7	30.3	2.2	1.9	747	0.6
제2금융권	0.9	0.6	0.7	3.8	706	0.4
전체	247.4	95.5	13.6	8.6	2,301	1.7

원자료 : 금융위원회 윤관석 의원실

주1) 월별 만기연장 지원 실적은 재연장(roll-over)신청 주기(통상 1년)에 따라 변동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2), KOSI 중소기업 포커스

□ 소상공인들의 자금차입 방식 설문에서 은행을 통한 자금차입이 49.6%로 가장 높았으며, 카드대출 14.2%, 서민금융기관 대출 12.0%, 정부 정책 자금 10.0%, 친인척 자금 4.4%, 사채 0.4%로 조사됨

- 특히 카드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차입의 편리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 금융기관 대출 거절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율이 30% 정도로 나타남
 - 대출거절 사유로는 담보부족(43.7%), 낮은 신용도(26.0%), 대출한도(16.7%), 보증서 미발급(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금조달의 주된 목적은 운전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것이 67.3%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투자(12.2%), 창업자금(11.1%), 부채상환(5.0%)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정책금융(신용보증) 부재 시 차금 차입의 대안으로 제2금융권(39.9%), 가족 및 지인(32.7%), 자금확보 포기(13.6%), 사금융 6.7% 순으로 조사되어 제2금융권의 의존도가 높고 가족 및 친지를 통한 비중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구입이나 관리비 및 세금을 위해서도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있음
 - 49.0%의 사업체가 외부 자금 차입 경험에 있다고 응답하고 있고 ‘원부자재 구입(31.5%)’, ‘관리비 및 세금 공과금(19.3%)’의 이유로 외부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음
 - 정책금융 부재 시 대안을 살펴보면 제2금융권(39.9%), 가족 및 지인(32.7%), 자금확보 포기(13.6%), 사금융 6.7% 투자자 모집 2.2% 순으로 조사됨

3. 개인사업자의 대출 및 연체율⁶⁾

- 통계청은 매년 개인사업자의 부채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데, 여기에서는 2022년에 통계청이 발행한 자료를 참조하여 2021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부채상황을 검토함
- 개인사업자의 부채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모두 포함함
- 2021년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1억 7,805만원으로 전년(1억 6,830만원)보다 5.8%(975만원) 증가함
- 대출용도별로는 사업자대출이 9,117만원이고 가계대출이 8,688만원으로 사업자대출이 많아졌음
- 사업자대출의 증가율(10.1%)이 가계대출의 증가율(2.7%)보다 높고 비은행대출(10.3%)이 은행대출(3.0%)보다 증가율이 높았음

<표3-2> 개인사업자의 용도 및 금융기관별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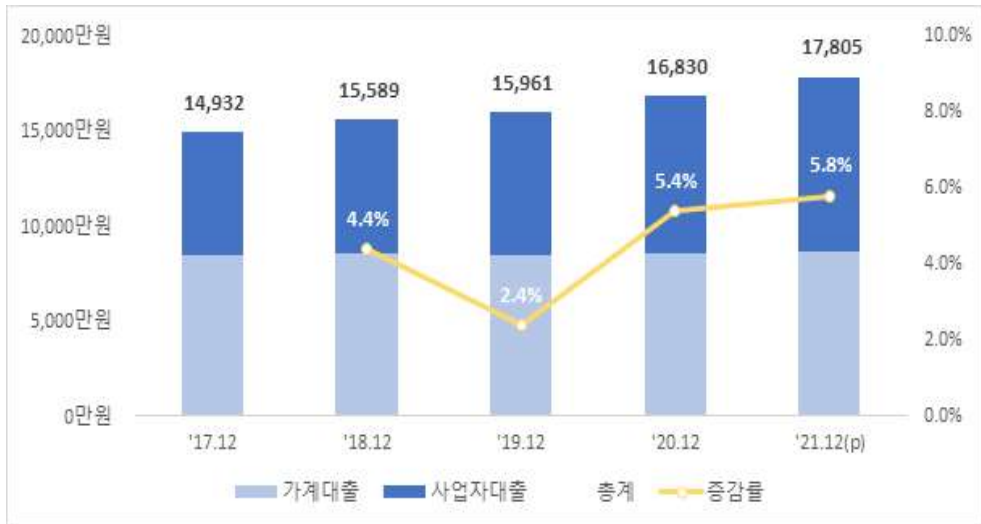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평균대출					중위대출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2021.12월	17,805	8,688	9,117	10,704	7,101	9,952
2020.12월	16,830	8,549	8,281	10,389	6,440	9,206
2019.12월	15,961	8,466	7,495	9,847	6,114	8,496
2018.12월	15,589	8,597	6,992	9,597	5,993	8,049
2017.12월	14,932	8,500	6,432	9,251	5,681	7,510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6)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3-14>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추이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0.32%로 전년보다 0.08%p 낮아지고, 차주수 기준이 연체율도 1.12%로 전년(1.26%)에 비해 하락함
 - 연체율이 크게 낮아진 것은 원리금 상황 유예 및 만기연장에 기인한 측면이 큼
 - 일반적으로 가계대출(0.34%)이 사업자대출(0.30%)보다 높는데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연체율 모두 전년보다 낮아졌음
 - 은행대출(0.08%)보다 비은행대출(0.68%)의 크게 높는데 비은행대출 연체율이 전년보다 크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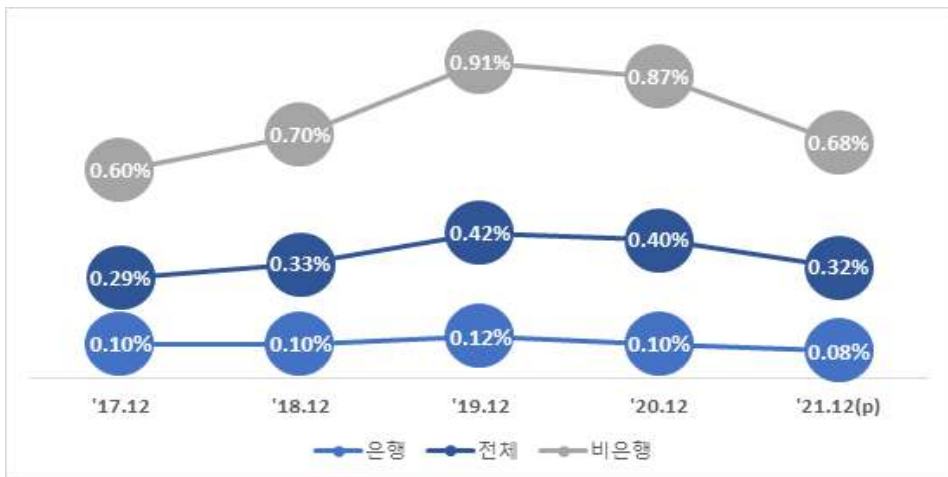
<표3-3>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단위 :%)

구분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연체율(차주수 기준)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2021.12월	0.32	0.34	0.30	0.08	0.68	1.12	1.18	0.35	0.42	1.46
2020.12월	0.40	0.42	0.37	0.10	0.87	1.26	1.32	0.38	0.48	1.65
2019.12월	0.42	0.48	0.37	0.12	0.91	1.42	1.44	0.52	0.61	1.77
2018.12월	0.33	0.41	0.24	0.10	0.70	1.35	1.38	0.45	0.54	1.69
2017.12월	0.29	0.35	0.22	0.10	0.60	1.26	1.29	0.36	0.50	1.55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그림3-15>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별 연체율 추이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 연령별로 연평균 대출금을 보면 50대의 평균대출이 2억 379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1억 9,603만원, 60대 1억 8,359만원 순임
- 49세 이하에서는 사업자대출보다 가계대출이 많고, 50대 이상에서는 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많은 상황임
- 29세 이하는 전년보다 11.8%(640만원), 30대는 9.5%(1,279만원) 증가함

<표3-4> 연령별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단위 :만원, %, %p)

연령		평균대출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2021.1 2	29세 이하	6,047	3,440	2,606	3,362	2,685	0.50	0.45	0.56	0.18	0.90
	30~39세	14,751	8,488	6,263	9,042	5,710	0.28	0.26	0.31	0.07	0.63
	40~49세	19,603	10,109	9,495	11,810	7,793	0.34	0.35	0.33	0.07	0.74
	50~59세	20,379	9,422	10,957	12,267	8,112	0.32	0.36	0.29	0.09	0.68
	60~69세	18,359	8,243	10,117	10,913	7,446	0.30	0.33	0.28	0.08	0.63
	70세 이상	13,823	6,409	7,414	8,369	5,453	0.30	0.33	0.27	0.07	0.65
2020.1 2	29세 이하	5,407	3,106	2,301	3,076	2,331	0.51	0.54	0.48	0.19	0.93
	30~39세	13,472	7,957	5,515	8,521	4,951	0.37	0.35	0.41	0.09	0.85
	40~49세	18,109	9,749	8,360	11,248	6,861	0.43	0.44	0.42	0.10	0.97
	50~59세	19,407	9,369	10,038	11,994	7,413	0.40	0.45	0.36	0.11	0.87
	60~69세	17,678	8,312	9,366	10,727	6,951	0.36	0.41	0.32	0.09	0.78
	70세 이상	13,604	6,556	7,048	8,400	5,204	0.35	0.38	0.33	0.08	0.79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29세 이하가 0.50%로 가장 높고, 30대가 0.28%로 가장 낮음

- 20대의 연체율이 사업자대출(0.56%)에서 특히 높음
- 모든 연령층에서 전년보다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이 감소함

□ 매출액이 많을수록 평균대출은 증가함

-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8억 8,222만원, '5~10억원 미만'은 3억 8,097만원임

□ 매출액이 낮을수록 총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 매출액 '3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계대출의 비중이 65.2%에 이르고
3~5천만원 미만' 57.1%, 5천만~1억원 미만' 53.8%임

□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연체율은 하락함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매출액 '3천만원 미만' 0.72%이고 '3~5천만원 미만' 0.23%, '5천만~1억원 미만' 0.20%로 낮아짐

<표3-5> 매출액별 평균 대출 및 연체율

(단위 :만원, %, %p)

연령		평균대출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2021.12	3천만원 미만	11,458	7,472	3,986	6,000	5,458	0.72	0.60	0.94	0.19	1.30
	3~5천만원 미만	13,514	7,721	5,793	7,527	5,987	0.23	0.24	0.22	0.05	0.46
	5천만~1억원 미만	15,038	8,083	6,954	8,526	6,512	0.20	0.21	0.19	0.06	0.38
	1~1.5억원 미만	17,512	8,866	8,647	10,054	7,458	0.14	0.14	0.13	0.04	0.28
	1.5~3억원 미만	22,122	10,046	12,076	13,363	8,759	0.14	0.12	0.16	0.04	0.29
	3~5억원 미만	29,192	11,775	17,417	18,868	10,323	0.14	0.15	0.13	0.04	0.32
	5~10억원 미만	38,097	13,259	24,839	26,228	11,870	0.09	0.10	0.09	0.04	0.23
	10억원 이상	88,222	17,974	70,248	66,186	22,036	0.09	0.09	0.09	0.03	0.27
2020.12	3천만원 미만	10,611	7,229	3,382	5,757	4,854	0.84	0.72	1.08	0.21	1.58
	3~5천만원 미만	12,397	7,410	4,987	7,070	5,327	0.29	0.32	0.24	0.08	0.56
	5천만~1억원 미만	14,165	7,974	6,191	8,239	5,926	0.29	0.29	0.28	0.09	0.56
	1~1.5억원 미만	16,610	8,739	7,871	9,757	6,853	0.24	0.24	0.25	0.07	0.48
	1.5~3억원 미만	21,494	10,244	11,250	13,313	8,180	0.20	0.21	0.20	0.07	0.42
	3~5억원 미만	28,438	11,910	16,528	19,025	9,413	0.18	0.17	0.18	0.07	0.40
	5~10억원 미만	37,694	13,569	24,125	26,508	11,185	0.18	0.15	0.19	0.04	0.51
	10억원 이상	87,226	18,437	68,790	66,196	21,030	0.16	0.15	0.16	0.06	0.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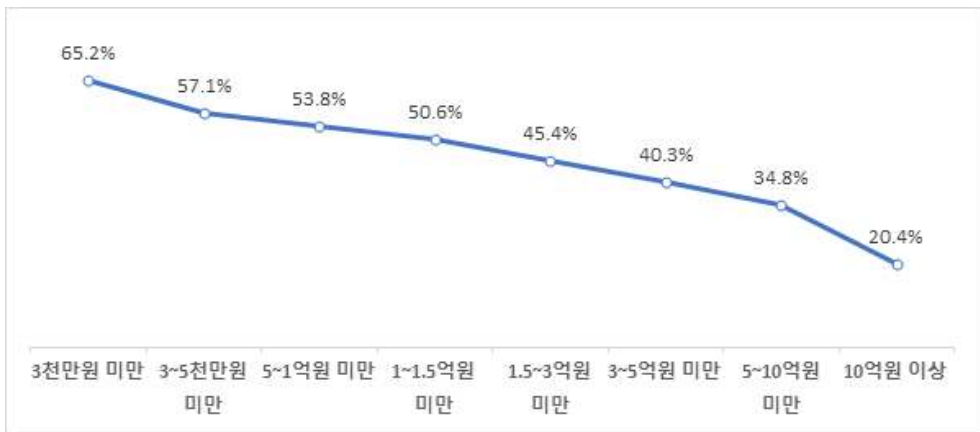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그림3-16> 매출액별 대출금액 추이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그림3-17> 매출액별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그림3-18> 대출액별 연체율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 사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2억 1,395만원, 3~10년 미만은 1억 9,123만원, 3년 미만은 1억 2,650만원 순임

○ 사업기간 3년 미만에서 평균대출이 전년보다 6.1%(730만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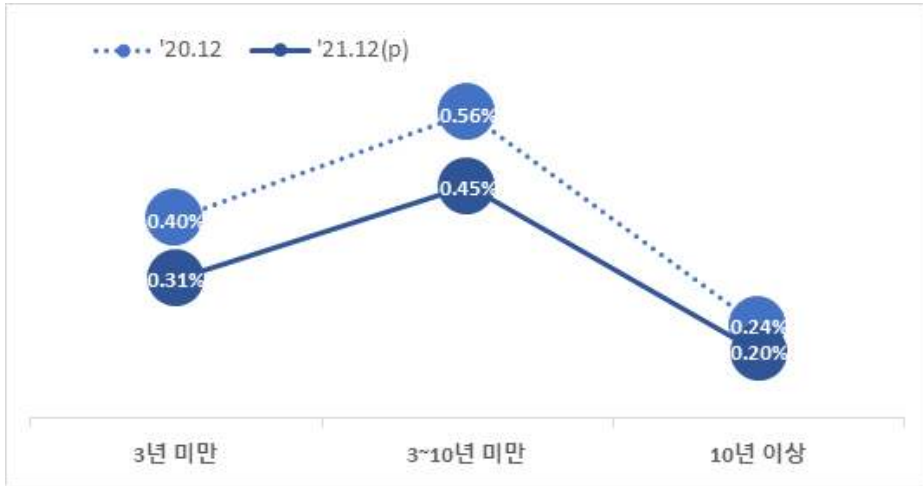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사업기간 3~10년 미만이 0.45%로 가장 높고, 10년 이상이 0.20%로 가장 낮음

<그림3-19> 사업기간별 평균대출액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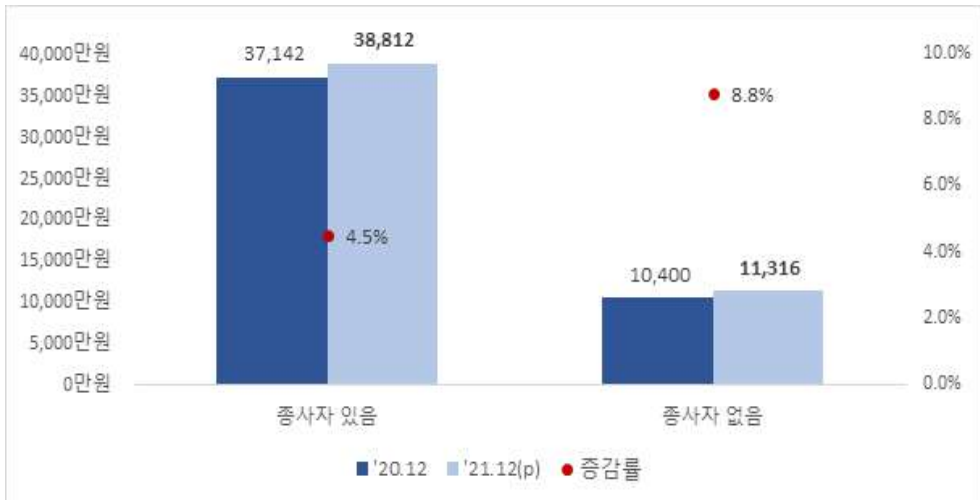
<그림3-20> 사업기간별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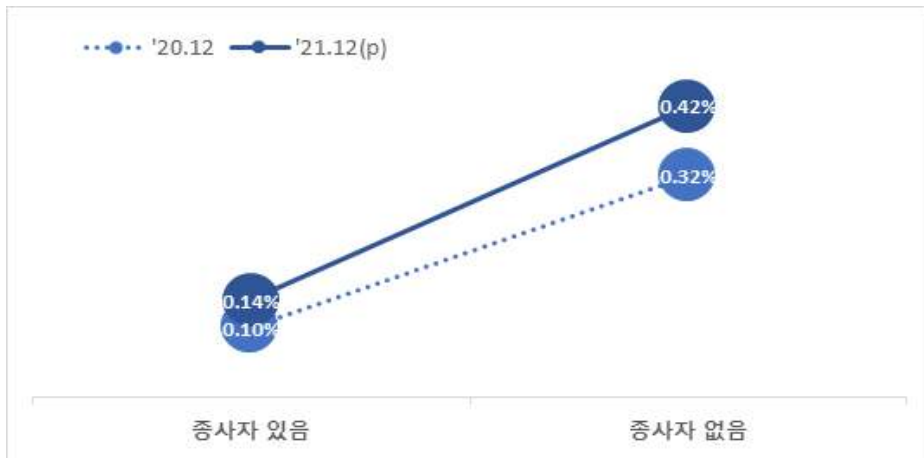
-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종사자가 없는 경우보다 3.4배 높음
 -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3억 8,812만원,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1억 1,316만원임
 -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평균대출은 전년보다 4.5%(1,670만원), 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8.8%(916만원) 증가함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종사자가 없는 사업체가 종사자가 있는 경우보다 더 높음
 - 종사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0.10%, 종사자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0.32%임
 - 이는 종사자가 없는 사업체가 경영상황이 더욱 취약함을 의미함

<그림3-21> 종사자 유무별 평균대출금액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그림3-22> 종사자 유무별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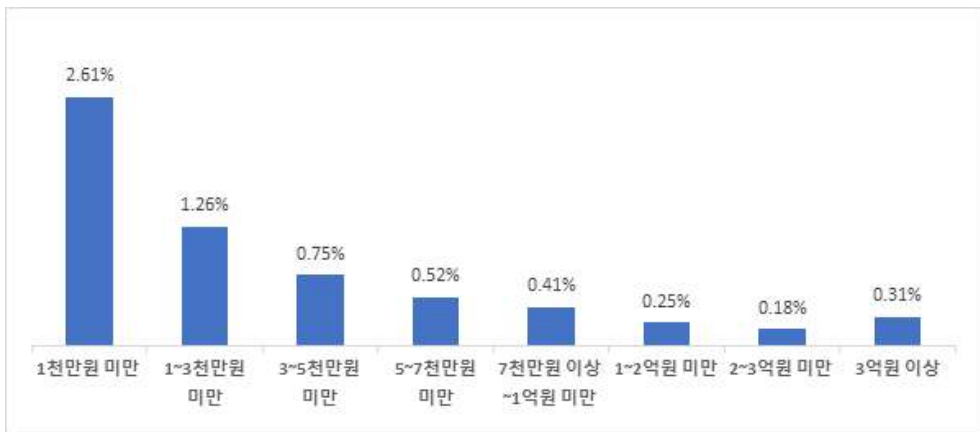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2.61%)에서 가장 높음
- 연체율(대출잔액 기준)은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이 2.61%로 가장 높고, '2~3억원 미만'이 0.18%로 가장 낮음

- 경영환경이 열악한 사업체는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 대출잔액이 작은 업체에서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대출잔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가계대출보다 사업자대출 비중이 더 높음

- 대출잔액 '1천만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사업자대출 비중이 모두 증가

<그림3-23> 대출잔액별 연체율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표3-6> 대출잔액별 평균대출 구성비 및 연체율

(단위 :만원, %, %p)

연령		평균대출 구성비					연체율(대출잔액 기준)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전체	대출용도별		금융기관별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가계	사업자	은행	비은행
2021.12	1천만원 미만	100.0	90.8	9.2	35.5	64.5	2.61	2.83	0.52	1.29	3.34
	1~3천만원 미만	100.0	72.3	27.7	46.0	54.0	1.26	1.63	0.30	0.59	1.83
	3~5천만원 미만	100.0	63.9	36.1	53.7	46.3	0.75	1.06	0.21	0.32	1.26
	5~7천만원 미만	100.0	64.9	35.1	55.2	44.8	0.52	0.69	0.20	0.23	0.87
	7천만~1억원 미만	100.0	67.4	32.6	56.8	43.2	0.41	0.50	0.22	0.19	0.69
	1~2억원 미만	100.0	71.7	28.3	58.5	41.5	0.25	0.27	0.21	0.11	0.46
	2~3억원 미만	100.0	70.9	29.1	60.4	39.6	0.18	0.18	0.18	0.07	0.36
	3억원 이상	100.0	40.2	59.8	61.0	39.0	0.31	0.29	0.32	0.06	0.71
2020.12	1천만원 미만	100.0	90.0	10.0	33.8	66.3	2.83	3.06	0.59	1.61	3.45
	1~3천만원 미만	100.0	74.3	25.7	45.5	54.6	1.31	1.66	0.27	0.65	1.86
	3~5천만원 미만	100.0	64.1	35.9	54.9	45.1	0.77	1.09	0.19	0.33	1.30
	5~7천만원 미만	100.0	66.8	33.2	56.1	43.9	0.55	0.72	0.21	0.26	0.92
	7천만~1억원 미만	100.0	70.1	29.9	57.7	42.3	0.40	0.47	0.22	0.19	0.68
	1~2억원 미만	100.0	74.2	25.8	59.7	40.3	0.29	0.31	0.25	0.12	0.55
	2~3억원 미만	100.0	72.4	27.6	61.8	38.2	0.24	0.24	0.25	0.09	0.50
	3억원 이상	100.0	41.6	58.4	62.9	37.1	0.40	0.41	0.40	0.08	0.94

자료: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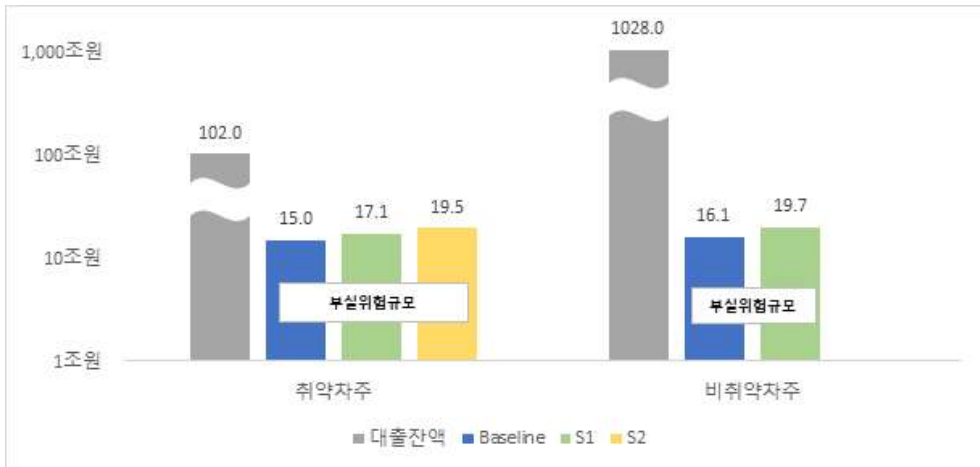
4. 자영업 대출의 부실위험규모

- ☐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비용 증대 등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2)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2022년 3/4분기말 현재 1,014.2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 유지
- 정상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2021년 2/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고, 가계대출 기관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다중채무자로 정의함
 - 2022년 3/4분기 중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은 18.7%(전년동기대비)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13.8%)을 크게 상회함
- 금융업권별로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3/4분기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8.7%로 은행(6.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2년 3/4분기말 현재 0.19%로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조치 등에 힘입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임
- 연체가 시작된 차주와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차주가 보유한 대출잔액 전체를 부실위험대출로 보고, 동대출이 전체 자영업자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부실위험률로 정의함
- 부실위험율이 코로나 19 이후에는 소상공인 경기의 주를 이루는 서비스업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냄

- 이는 코로나19 위기시 손실보전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금융지원조치들이 시행되는 것에 기인함
-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정상 차주의 부실위험률이 적게 하락하여 부실위험률 하락은 주로 금융지원조치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음
 - 2022년 3/4분기말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1.3%로 코로나19 직전 대비 6.5%p 하락한 반면, 비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0.6%로 같은 기간 중 0.1%p 하락에 그침
- 대출금리 추가 상승(2023년중 평균 50bp 상승), 서비스업 경기 둔화, 금융지원조치 효과 소멸 시 부실위험률 변화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은 금리상승 등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짐
 -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실위험률 상승폭은 더욱 확대됨
- 금리 및 성장률 충격 발생시 비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9%까지,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6.8%까지 상승할 것임
 - 금융지원 정책효과가 소멸될 경우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대출 규모를 추정해보면, 취약차주는 15.0~17.1조원, 비취약차주는 16.1~19.7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그림3-24> 부실위험률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주1) 2023년말 기준 차주별 예상 대출잔액 및 부실위험규모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5.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추정

- 정은애·남윤형(2022)은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63만 2,011개를 대상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및 한계소상공인을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 보고서의 결과를 소개함
 - 부실 소상공인은 1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사업자로 정의함
 - 한계 소상공인은 부실이 최소 4분기 이상 연속되는 사업자로 정의함
- 2017년 2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최근 5년 동안 1분기에 부실이 한 번 이상 발생한 사업자 수는 24만 9,342개이며, 그 비중은 39.5%임
 - 사업을 하는 5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해 1분기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부실 상태로 빠지는 사업자가 63만 2,011개 중 24만 9,342개로 약 39.5%라는 것을 의미함

○ 부실로 진입한 후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임

○ 1분기 부실이 발생한 수를 100으로 보고 연속 부실 발생한 경우를 살펴보면, 1분기 부실 상태 진입 후, 2분기 연속 부실로 가는 경우는 약 55.6%, 3분기 연속으로 가는 경우는 약 39.8%, 4분기 연속 부실인 한계로 진입하는 경우는 약 31%인 것으로 나타남

□ 정상인 경우와 부실인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과 부채액을 비교해보면, 모두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정상인 경우 연평균 매출액은 약 2.35억원인 반면, 부실인 경우에는 모두 1억원 미만으로 매출액이 낮게 나타남

○ 부채액은 정상인 경우 약 0.97억원인 반면 1분기에만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채액은 약 2.16억원으로 높으며 부실이 연속될 경우 부채액은 계속 증가함

○ 이는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3-7> 정상 및 부실 사업자의 연평균 매출액과 부채액

(단위 : 억원)

구분	정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6분기	7분기	8분기	9분기	10분기
연평균 매출액	2.35	0.75	0.60	0.44	0.18	0.17	0.17	0.17	0.16	0.16	0.15
평균 부채액	0.97	2.16	2.53	2.81	3.02	3.22	3.43	3.58	3.66	3.74	3.82

원자료 : 신한카드·KCB

자료: 정은애·남윤형(2022) 재인용

□ 업종별로 보면, 숙박업과 제조업의 부실과 한계 비중이 높으며 부채액도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큼

-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한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에서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1분기 부실인 비중은 숙박업이 46.4%, 제조업이 41%, 운수·창고업이 40.6%, 자동차·중개·도매업이 38.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4분기 연속 부실인 한계 비중은 운수·창고업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숙박업이 29.5%, 제조업 25.9%, 자동차·중개·도매업 22.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계 사업자의 평균 부채액은 숙박업이 13.8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여가 서비스업이 6.8억원, 전문서비스업이 5억원, 식음료업이 4.9억원, 제조업이 4.4억원임

□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매출액 1억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으며, 1억원 이상부터 그 비중은 감소하나 평균 부채액은 큰 폭으로 커짐

- 매출액 구간에 따른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을 보면, 연평균 매출액 1억원 미만 구간에서 부실 약 36.6%, 한계는 약 22.1%이며, 평균 부채액은 부실 사업자가 약 2.7억원, 한계 사업자가 약 3.4억원임
- 정상 사업자의 한계 사업자의 평균 부채액과 비교하면, 1억원 미만 구간의 한계사업자는 정상기업에 비해 약 5.7배, 1~3억원 구간에서는 약 18.2배, 3~5억원 구간에서는 약 20.9배, 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약 19.8배 높음

<표3-8> 매출액 규모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부실		한계		정상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1억원 미만	36.6%	2.7	22.1%	3.4	77.9%	0.6
1~3억원 미만	7.2%	9.1	1.6%	23.6	98.4%	1.3
3~5억원 미만	4.3%	16.4	1.0%	41.8	99.0%	2.0
5억원 이상	2.8%	23.1	0.6%	57.5	99.4%	2.9

주1) 정상은 한계(4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

원자료 : 신한카드·KCB

자료: 정은애·남윤형(2022) 재인용

□ 신용등급별로 보면 사업자 신용도 1분위에서 5분위로 갈수록(높아질수록)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비중은 감소함

○ 신용도가 가장 낮은 1분위의 부실 및 한계사업자 비중은 각각 43.9%, 19.4%이며, 신용도가 가장 높은 5분위의 부실 및 한계 사업자 비중은 각각 8.7%, 5.9%로 나타남

<표3-9> 신용등급별 부실 및 한계 소상공인 현황

(단위 : %, 억원)

구분	부실		한계		정상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비중	평균부채
신용 1분위	43.9%	2.2	19.4%	3.0	80.6%	0.7
신용 2분위	31.9%	3.2	18.5%	3.8	81.5%	0.9
신용 3분위	27.8%	3.5	17.6%	4.1	82.4%	1.1
신용 4분위	18.1%	4.2	11.9%	4.8	88.1%	1.2
신용 5분위	8.7%	7.6	5.9%	8.7	94.1%	1.6

주1) 정상은 한계(4분기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사업자) 소상공인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를 의미

원자료 : 신한카드·KCB

자료: 정은애·남윤형(2022) 재인용

- 소상공인 부실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물가로 가정하고, 이 두 변수의 변화가 한계 소상공인 비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시나리오로 살펴봄
 - 경기침체 우려와 경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와 영업이익의 변화가 실제 한계 소상공인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시나리오1 : 베이비스텝)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영업이익 5% 감소 가정 추가)과 부채액을 고정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2.75%로 상승했을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율과 수를 추정함
 - (시나리오2 : 빅스텝)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영업이익 5% 감소 가정 추가)과 부채액을 고정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3%로 상승했을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율과 수를 추정함
 - (시나리오3 : 자이언트스텝) 2022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영업이익 5% 감소 가정추가)과 부채액을 고정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3.25%로 상승했을 경우 한계 소상공인 비율과 수를 추정함
- 2022년 12월 현재 기준금리가 3.5%에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3의 결과를 살펴보면,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소상공인은 약 18.6%이며, 영업이익 5% 감소 시 약 19%로 추정됨
 -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88만 5,010개, 한계 소상공인은 127만 2,790개로 추정됨
 - 영업이익 5% 감소를 가정한 상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여 기준금리가 3.25%가 될 경우,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는 90만 4,042개, 한계 소상공인은 130만 162개로 추정됨

- ☐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물가보다 금리 충격이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에 소상공인 부채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표3-10> 영업이익에 따른 한계 소상공인 비율

(단위 : %, 억원, 개)

기준금리		한계 소상공인				추정 한계 소상공인	
		기업 수	비중	평균부채	연평균 매출액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영업이익 변동 없음	1.25%	64,799	15.0	4.58	0.16	713,718	1,026,444
	2.50%	74,747	17.3	4.56	0.23	823,154	1,183,832
	3.25%	80,291	18.6	4.52	0.27	885,010	1,272,790
영업이익 5% 감소	1.25%	66,086	15.3	4.58	0.16	727,992	1,046,973
	2.50%	76,395	17.7	4.55	0.24	842,187	1,211,204
	3.25%	82,166	19.0	4.51	0.29	904,042	1,300,162

주1) 2022.1분기 기준으로 총 431,85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석

주2) 2022.1분기 기준금리 1.25%일 때, 정상기업의 평균 부채액은 약 1.28억원, 연평균 매출액은 약 2.1억원임

자료 : 신한카드·KCB

6. 소상공인 금융의 특징

- ☐ 소상공인은 경영자원이 취약할 뿐 아니라 재무정보가 부족하여 소상공인 금융은 여타 금융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 높은 거래비용, 높은 위험인식, 담보 부족 등으로 요약됨

1) 정보의 비대칭성

- ☐ 일반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간에 정보가 완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많은 정보의 비대

칭성이 존재함

- 금융시장에서 대출이란 현재 자금을 제공받고 일정한 시간에 지난 후에는 이를 상환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 매매의 현물거래와는 성격을 달리,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정보를 요구함
 - 대출은 현재 자금을 제공받으면 일정시간 후에는 자금을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반대방향으로의 자금흐름이 이루어져야 완결됨
 -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후에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대출이 이루어짐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자금 수요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다른 대출에 비해 높음
 -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불확실성이 커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됨
-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ction problem)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역선택이란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의미함
 - 질 좋은 상품의 공급자들은 질이 나쁜 상품들과 비슷한 가격에서 거래되는 것에 불만족하게 되어 상품 만들기를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질 나쁜 상품만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에 대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면 대출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금리를 높이면 소상공인들 중에서 상환가능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자금을 대출받으려 하고 이는 결국 부도 확률이 높아져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업체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금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정보의 불완전성에 따라 도덕적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함

- 도덕적해이란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라고도 하는데 이는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에는 주인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주인의 이익에 반하게 된다는 현상을 의미함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경우, 즉, 금융기관은 대출을 한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감독이나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차입한 소상공인들이 상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부문에 자금을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꺼리게 됨

2) 소액대출에 따른 높은 비용

-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규모는 일반적으로 5,000만원 이하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대출에 비해 작음
- 대출관리비용은 일반적으로 대출규모에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

- 관리비용에는 정보수집비용과 분석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보수집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분석기법에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해 정보 분석에 많은 비용이 수반됨
- 이러한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회계정보나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는 특성에 기인하기도 함
- 금융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해줄 때는 이러한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일반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3) 높은 위험인식

- ☐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함
 - 소상공인들의 업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 매우 취약하다고 인식함
 - 소상공업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업력이 매우 짧고 생계위주형의 사업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업종이 대부분을 이룸
 - 경영능력이나 적절한 회계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못해 상환능력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신뢰도가 떨어짐
 -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출을 꺼리는 경향이 심함
- ☐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나 제반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되어 위험성이 높다고 인식됨

- 우리나라 자영업의 폐업률이 87.8%로 10곳이 문을 열면 8.8개가 문을 닫는 실정으로 폐업률이 매우 높아 소상공인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인식됨

4) 담보부족

- ☐ 담보는 과도한 위험의 부담에 따른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경우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과도한 위험부담에 따라 사업의 결과가 좋지 못해 사업에 따른 현금 흐름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를 처분해 상환하도록 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역할을 함
- ☐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미래의 상환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담보를 많이 이용됨
 - 자금의 공급자가 수요자의 미래 상환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자금상환을 담보하기 위함
 - 담보물은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의 공급자에게 자신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기 심어주기 위한 수단이 됨
- ☐ 소상공인들은 담보물이 부족한데, 특히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특별히 담보물로 제공할 부동산이나 동산이 부족함

IV. 포용금융과 소상공인정책자금

1. 포용금융과 소상공인금융

1) 포용금융의 정의 및 효과

- ☐ 포용금융은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소득불평등 완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를 위한 많은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저축, 대출, 지급결제 등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반에 걸친 접근성 제고를 추구하고, 선진국은 저소득층이 특별하게 애로를 겪고 있는 신용대출에 대하여 용이한 접근을 강조함
- ☐ 포용금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함
 - 박창균(2015)은 금융포용을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양질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으로 보장된 상태” 정도로 규정함
 - 노형식·이순호(2014)는 금융포용을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함
 - 금융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접근(effective access)이란 거래가격이 소비자가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수준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공자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함을 의미함
- ☐ 포용금융의 확대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킴
 - 저소득층의 은행계좌 보유가 저축률과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있음

- 금융포용의 확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촉진시킴
 - 저축계좌를 보유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하여 가족 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지님
 - 여성 영세 자영업자들 중 예금계좌를 개설한 여성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하여 높은 저축률을 보일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율도 높음
 - 포용금융 지표와 빈곤 지표 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
 - 포용금융의 확대가 빈곤 축소에 장기적으로 기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함
- 금융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켜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경기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전반의 건전성을 개선시킴
- 금융포용의 확대는 사회적 긴장완화, 복지비용 절감 및 금융·경제의 체질 향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편익이 제고됨
- 우리나라는 금융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포용 금융 수준으로 평가됨(박창균, 2015)
- 세계은행은 2011년부터 『The Global Financial Inclusion Index (Global Findex)』 프로젝트를 통하여 전 세계 150여 개국을 대상으로 금융포용 정도를 측정함
 - 2014년 기준 계좌 보유측면에서는 135개국 중 24위, 저축은 17위, 대출은 28위를 기록하는 등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출은 상대적으로 떨어짐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금 취급기관의 지점 및 ATM 개수, 1인당 신용 및 예금규모 등이 크게 성장하여 물리적 접근성 확대
 - 전국적으로 지점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우체국에서도 예금, 보험, 지급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형적 측면에서의 금융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
 - 최근 서민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도 제공되고 있어 외형적 금융포용이 더욱 확대됨
- 금융서비스 부문별로 금융소외가 발생하는 원인을 구분해 보면, 대출·신용의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신용할당, 예금·지급결제의 경우는 비정보적 요인에 의한 가격 문제가 주요 요인이 됨
- 대출·신용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 되도록 가격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아 해당 시장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
- 통상의 상품시장에서는 상품의 인도와 가격의 지불로 거래관계가 종결되지만 대출계약은 대출상품의 인도와 대가의 지불이 약속의 형태로 이루어짐
 - 이러한 대출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상품의 가격(이자율)과 실제로 지불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통상의 상품에 비해 높기 때문에 차주의 부도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매우 중요함
 - 이자율이 가격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선별 방법을 이용하여 차주를 선택하는 신용할당의 문제가 초래됨

- 통상적으로 더 많은 대출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할 용의가 있는 차주는 더 높은 위험추구의 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이자율에서는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형태의 후방 굴절형 공급곡선이 초래되어 신용할당의 문제가 발생함

2) 소상공인금융의 확대와 포용금융

- 소상공인 금융은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의 한 부분으로 포용금융의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금융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서민금융은 신용위험(credit risk)이 높아 자신의 신용만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특히 은행으로부터 담보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계층, 즉,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에 직면해있는 경제 주체로 정의가 가능함
 - 소상공인들도 앞에서 제시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높은 거래비용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됨
-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을 들고 있어 소상공인의 금융확대는 금융포용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됨
 - 소상공인 창업시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조사됨
 - 경영상의 가장 큰 문제로도 자금의 조달을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음
- 소상공인은 업체수가 2019년 현재 328.5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로는 661.7만명으로 전체의 36.9%를 차지함
 - 소상공인 업체수는 328만개로 전체 사업체(387만)의 84.8%를 차지함
 -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2019년 현재 661.7만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

(1,793.4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9%를 차지하고 있음

- ☐ 우리나라 개인별 신용등급의 분포를 보면 4등급 이하가 전체의 53.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이 등급에 속해 금융의 접근성에 애로를 겪고 있음
- ☐ 소상공인 중 특히 저신용자의 자금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포용금융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현황

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목표

- ☐ 소상공인은 국민경제적으로 고용이나 생산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
 -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업체는 약 645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약 8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약 922만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약 37.9%를 차지함
 -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01~2006년 중 생계형 서비스산업의 고용탄성치는 0.17로 제조업의 2배 수준이고, 특히 생계형 서비스산업은 중년층, 여성층 등의 고용이 많아 소득취약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높음
 - 특히 경기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을 필두로 한 서민들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소득배분이 악화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 ☐ 소상공인 금융이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 및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한 신용보증, 직간접대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함

- 소상공인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실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시장에 개입해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
 -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시장 개입이 시장을 압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보완하는 것임
-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정책 기본방향은 금융시장에서 시장 실패영역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금융시장을 배제하거나 경쟁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됨
 - 정부의 소상공인금융 지원대상은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각종 금융 마찰로 인해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으로 한정해야 할 것임
- 소상공인 금융정책은 크게 소상공인의 자금가용성(availability) 확대와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신용보증, (직접)대출, 이차보전 등의 금융지원이 수행됨
 - 대출이나 이차보전은 재정자금이나 정부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신용보증은 소상공인의 취약한 담보력과 신용도의 보강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자금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2)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종류

- ☐ 소상공인 금융정책으로는 소상공인 용자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보증지원(신용보증)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살펴봄
-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일반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스마트 소상공인전용자금, 그리고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방식은 공단에서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직접대출과 은행 등을 통하여 취급하는 대리대출 방식이 있음
 - 매년 지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
- ☐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창업 초기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을 주로 함
 -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일반, 창업초기, 여성가장지원, 사업전환, 창업사관학교연계 등이 있음
- ☐ 성장기반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대상의 소상공인특화자금과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대상의 성장촉진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소공인특화자금과 시설을 위한 성장촉진자금은 공단이 직접대출을 취급하고, 성장촉진자금의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대리대출로 취급함
 - 성장촉진자금은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에 대한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 지원으로 장수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함
- ☐ 스마트 소상공인전용자금은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스마트설비 도입자금으로 구분됨

□ 특별경영안정자금에는 장애인기업, 위기지역지원,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있음

-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청년인 소상공인이나 청년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

<표4-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유형

구분	세부	신청요건
성장 기반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직접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
	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업력 3년 이상이며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대리대출)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스마트자금	(직접대출)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②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지정된 ‘혁신형 소상공인’ 중 지정연도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③ 기타 사회적경제기업, 수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강한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일반경영 안정자금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 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직접대출)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특별경영 안정자금	청년고용연계 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직접대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 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를 받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리대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 받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 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또는 기업)
	위기지역 지원자금	(대리대출)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 지역 등 지역경 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제공방식에 따라 소상공인이 직접 취급하는 직접
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 취급하는 대리대출로 구분됨
- ☐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체 금융전산시스템(OLS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지역센터를 통해 접수하여 직접 심사, 약정 및 지급
하는 대출임
 - 사업성평가 대출은 소상공인의 사업성(경쟁력, 환경, 역량), 시장성(성장성
및 거래안정성) 및 경영관리능력(대표자 역량, 업력, 신용상태)을 현장 평가
하여 이루어짐

- 간이심사대출은 저신용자 등에 대하여 '연체, 세금체납 및 회생 등이 없는 경우' 사업성 평가 없이, 비대면 약정 및 지급하는 대출임

□ 대리대출은 공단이 ①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②지역신보가 보증서 발행 후, ③금융기관에서 보증서 또는 소상공인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는 대출임

- ① (소상공인 확인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발급
- ② (보증서 발행) 지역신보가 신용등급 6등급 이내, 연체·체납이 없는지 확인 후 80~100% 담보 보증서 발행
- ③ (은행심사 및 대출실행) 자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후 적격자에게 지역신보 발행 보증서 또는 소상공인 부동산 등 담보로 대출

3) 소상공인정책자금 추이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15년 44,233개 업체에 1조 4,939억원 지원하던 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22만 6,632업체에 3조 7,61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조 2,045억원이던 것이 2020년에는 4조 5,5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직접대출이 대리대출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직접대출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직접대출을 통해 저신용자 대출 증대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됨

- 직접대출은 2019년 6,034억원, 2020년 1조 4,444억원, 2021년 3조 215억원으로 2020년 이후 2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표4-2〉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접대출	3,507	5,086	4,355	4,868	6,034	14,444	30,215
(비중)	(23.5)	(29.0)	(19.4)	(23.7)	(27.4)	(31.7)	(80.3)
대리대출	11,432	12,464	18,095	15,708	16,011	31,056	7,395
(비중)	(76.5)	(71.0)	(80.6)	(76.3)	(72.6)	(68.3)	(19.7)
합계	14,939	17,550	22,450	20,575	22,045	45,500	37,610
건수	44,233	48,341	64,497	57,625	58,462	186,215	226,632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자료

V. 포용형 소상공인금융 혁신방안

1. 소상공인 금융의 디지털화

- ☐ 소상공인 금융 업무 프로세스는 표준화, 단순화, 그리고 디지털화 수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금융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짐
 -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 금융기관마다 프로세스가 상이하고 각종 자료가 디지털화가 미비하여 업무의 중복이나 효율성이 떨어짐
 - 온라인 접수를 통해 자가진단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입력자료의 객관성 미흡으로 본심사와 연계 활용에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함
 - 행정망을 통해 정보조회 가능하나 열람용에 그치는 한계로 신청 기업에게 직접제출을 추가 요구하는 문제 발생함
 - 기업마다 정형화되지 않은 서류 제출로 수기 입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있음
 - 정책금융기관 간 외부 연계기관의 차이로 인해 정책금융 기관별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격차가 큰 상태임
- ☐ 정책금융기관 고객정보의 DB화에 대한 표준이나 이를 활용한 각종 지표로의 활용 및 정책금융 기관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활용 계획 등도 미흡한 수준임
 - 소상공인 금융 지원기관별로 고객층이 분리되어 있지만 요구되는 외부 연계데이터가 동일함에도 기업이 중복 서류를 각 기관에 제출하는 등 정책 금융기관 업무내용·프로세스의 일관성·통일성 등이 부재한 실정임

- 무엇보다 위기 시 긴급금융지원을 위한 기관내·기관간 공통 가이드라인도 부재한 실정임
-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업무프로세스를 단순화, 표준화하고 이를 디지털화해야 할 것임
- 금융관련 기존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자동화 효과를 극대화함
- 기존의 보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신속성을 높임
- 소상공인의 필요자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금융지원 방식만이 아니라 비대면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채널의 디지털화만이 아니라 금융지원 전 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의 간소화, 표준화 및 디지털화가 필요
- 스위스의 사업자 종합 지원 플랫폼은 접수채널을 일원화하고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고 있어 자금공급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고하고 있음

2. 소상공인 금융 정보 플랫폼 구축

- 현재 소상공인 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이 있는데 이들 간에 금융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금융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소상공인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금접근의 신속성을 높임

- 데이터 보유 기관들의 협업을 통해 정책대상 중복선정을 방지하고 대상 선정의 효과성을 제고함
- 정책금융기관이 서로 생산 보유한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정보 제출 편의성을 제고하고 선정 대상의 효과성을 제고함
- 생산정보의 단순 공유를 넘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정보제출 편의성도 제고함
- 정책대상 중복선정을 방지하고 대상 선정의 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음
-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금융지원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은 컨설팅이나 교육과의 연계지원 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책자금시 다른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상공인 금융지원기관들 간의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자금 지원시 연계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소상공인 금융을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하여 소상공인 금융의 적시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상공인 관련 통계에 대한 각종 심리·체감 데이터의 객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소상공인 금융지원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함
- 기업재무정보, 금융기관, 국세청 등의 공공·민간데이터를 연계·활용 극대화
- 소상공인 경기상황을 지자체·업종별·기업별로 파악하고, 대시보드를 통해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중앙정부 · 지자체 ·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 공유하여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책설계 · 집행 지원함
- 소상공인 현장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중앙 · 지자체 · 공공기관이 현장상황을 공유하도록 함

3. 관계형 금융 기반 조성

- ☐ 금융기관과 소상공인간의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또한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화된 정보가 적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비공식적 정보를 통한 관계형 금융이 매우 중요함
 - 관계형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조달 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금융권의 심사역량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 장기적인 관계형 금융이 은행에서 관행으로 정착함
 - 주거래은행을 관계형 금융 활성화의 교두보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은 주거래은행제도를 통해 기업과 은행간 오랜 거래 관계를 통해 관행으로 정착함
 - 은행은 관계형 금융체제를 구축하고 거래기업과 약정을 맺어 관계형 금융을 지원함
 - 은행은 관계형 금융 전담조직을 두고 책임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마련하고 기업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관계형 금융체제를 구축함

- 은행은 거래중소기업과 약정을 맺고 장기대출, 자금지원 이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거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
- 관계형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금융기관간의 장기간에 걸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입장에서조차 주거래 은행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오랜 기간을 두고 정착돼 온 주거래은행 관계를 통해 은행과 소상공인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은행은 거래 소상공인의 연성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정보상 우위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금융수요를 적기에 충족해주는 등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
 - 주거래은행은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
- 관계금융 관행을 정착해나가는 데 필요한 은행과 소상공인 사이의 장기 거래 및 건전한 상거래문화를 구축해 가는 노력이 필요함
 - 공격적인 가격경쟁을 활용한 고객 확보 전략은 지속하기 어렵고, 이는 은행의 수익과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함
 - 단기간의 금리 차를 기대하면서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중소기업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음
 - 은행은 무리하게 가격경쟁을 하기보다는 서비스의 질로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거래 상대방을 선택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에서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
 - 관계형 금융은 노동집약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수집 등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나아가 지역은행 등이 적합함
 - 정책금융기관에서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기능을 강화

4. 민간금융 구인 방안(협조용자)

1) 협조용자

- 민간 상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협조용자방식 도입을 통해 일반지원자금의 공급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함
 - 협약은행에 기금을 예치시키고, 협약은행은 약정에 따라 정책자금이 아닌 은행의 운영자산 중 일정금액을 특정대상에게 대출하는 방식임
 - 일정기간 동안 기금을 조성 후 민간상업은행과의 협약을 통한 협조용자 방식의 도입을 검토함
- 협조용자를 실시하는 경우 정책자금 금리의 현실화가 필요함
 - 실제 리스크를 감안한 소상공인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간의 격차가 너무 클 것으로 정책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이지 않는 경우 자금에서 지급하는 이차보존율이 너무 높아 협조용자의 규모가 기대보다 상당히 작을 우려가 있음
 - 협조용자방식은 실제 대출리스크가 고려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수준의 2~3배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음

2) 상업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공동자금 운영

- ☐ 민간상업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이를 민간은행이 운영하도록 함
 - 민간은행자금을 소상공인 자금으로 유인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민간은행이 공동자금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의 출연 자금과 민간은행 출연자금의 수익률을 달리하도록 디자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자금에 대해서는 조달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지급하고 민간은행자금에 대해서는 협조융자에 부과하는 금리를 지급함
 -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부여하고 대출금리는 두기금의 가중평균으로 설정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기금출연과 은행출연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함
 -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은행은 손실금의 20%만 부담하고 이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나누어 부담하므로 신용위험이 크지 않아 은행으로서는 매우 매력적임
- ☐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보다는 높지만 일반 은행자금보다는 낮아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은행이 보다 많은 자금을 소상공인자금으로 전환하게 되어 민간자금을 구인

하는 효과가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 이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은행의 출연을 1:1로 하고 출연하는 각각의 금리가 3%, 5%이라고 가정하고 각각 5,000억원을 출연하는 경우 이 공동자금의 대출금리는 4%가 되어 은행의 출연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소상공인 자금 공급도 5,000억원이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함
- 사고가 발생하여 대위변제율이 3%가 된다고 가정하면(80% 신용보증시) 기금과 은행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각각 30억원으로 실제로 은행의 대출대비 대위변제금액은 0.6%에 해당해 매우 낮은 정도로 충분히 은행은 이를 부담할 수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은행의 출연비율이 1:2로 증가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출연이 5,000억원인 경우 이 공동자금의 대출금리는 4.33%가 되어 금리는 상승하지만 은행 단독의 대출금리보다는 낮은 금리로 1조원의 추가적인 소상공인자금이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함
- 사고가 발생하여 대위변제율이 3%가 된다고 가정하면(80% 신용보증시) 기금과 은행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각각 30억원과 60억원으로 실제로 은행의 대출자금 대비 대위변제금액은 0.6%에 해당해 매우 낮은 정도로 충분히 은행은 이를 부담할 수준임

5.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 동산(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은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
- 동산은 중소기업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인적 담보를 보완할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잠재력이 높음

- 동산은 경영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어 부동산이 없는 초기 기업도 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함
- 하지만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규모와 금액이 작고 변동성이 큰데다 양도가 쉬워 담보로서의 경제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이 낮음
- 따라서 예기치 않는 담보가치의 하락 등 부실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법규준수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을 분명히 해야 함

□ 미국에서도 자산을 담보로 하는 ABL(Asset Based Lending) 제도가 크게 발달함

- 미국 ABL제도는 부동산담보, 신용대출 등과 달리 다양한 동산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어 유연성이 높음
- 여러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고 있어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부동산과 달리 경기 침체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음
- 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도 늘어나 성장자금 수요에 대처가 가능함

□ 미국 ABL제도 활성화는 평가 관리 회수 등을 위한 합리적 시스템 구축에서 기인함

- 자산 평가를 위한 동산전문 감정평가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평가액을 토대로 대출신청 등을 대신하는 전문 자문회사가 존재함
- 은행이 안심하고 ABL을 취급하도록 현장조사(field examiner), 담보 처분(liquidator)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발달함
- 이중담보방지를 위해 동산담보내역 등이 모두 담긴 금융명세서를 전

자등기하여 개별 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가 투명하게 공시함

□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책금융을 지원함

-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대출에서 소외됨
- 신용보증기관은 중소기업이 동산담보 대출시 보증을 지원함
 - 일본에서는 2007년 신용보증 대상을 동산담보융자로 확대하여 융자 금액의 80%까지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는 '유동자산 담보융자보증 제도'를 도입함

□ 동산담보대출의 대표적인 형태로 매출채권보험 등을 들 수 있음

- 보험은 기업이 감내해야 할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축소 이전함으로써 기업의 생존력을 높이고 경제의 구조적 위기 발생 확률을 축소하는데 유용함
- 어음보험과 매출채권보험 등 신용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투자 형태의 소상공인 자금유입 방식을 도입함

- 민간이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상권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매칭투자하여 위험이 실현되는 경우 손실을 먼저 정부의 매칭자금이 부담하게 하여 민간자본을 유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민간이 투자하는 경우 민간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저금리로 대출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 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음

6. 창업 및 초기 소상공인 중심의 직접대출

- 대리대출은 근본적으로 대출취급기관이 부실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들이 차주의 사업성 평가를 통한 대출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보증서 담보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부실화에 따른 손실 방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동산담보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보증비율 85~100%)를 요구함
 - 특히 은행은 평판위험을 고려하여 신용위험도가 높은 고금리대출보다는 거액 여신 및 자기대출을 취급함
-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융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운용되어야 하나 대리대출의 경우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서 발급과정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직접대출을 위한 심사가 아니라 보증한도를 위한 심사이며, 결국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위변제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보증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적인 보증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가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직접대출은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차입자에게 대출하기 때문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타깃을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선정하여 대출할 수 있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직접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이나 일반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초기 및 창업 소상공인, 신규 자금 용자를 받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직접대출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직접대출을 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및 회수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대출 접근성에 있어 신규대출은 어렵지만 이후 유지는 쉬운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신규대출에 직접대출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높은 금리 지불 없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므로 고신용자에 대한 직접대출은 축소하고, 금융시장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자금을 이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한 직접대출을 확대하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용자 대상 신용등급을 일정 등급 이하로 제한하거나 혹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거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음
 -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신용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이유는 저금리자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 소상공인은 가능한 한 배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자금이 사용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의 구체적 예로 창업업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혁신형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대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7. 소상공인 금융지원 역량강화

- ☐ 소상공인 금융정책기관은 신용위험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판별하는데 있어 개인보다 잘 조직화되어 역선택의 문제를 줄일 수 있어야 하고 대출받은 차입자를 잘 감시해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해야 함
 - 전문지식과 정보수집에 유리하고, 정보의 수집, 가공, 생산측면에서의 이점을 갖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의 문제를 완화해야 함
 - 차입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경영이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업체의 각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연성정보를 축적해야 함
 - 소상공인 금융을 위한 체계적인 연수나 훈련을 통해 금융지식이나 금융기법을 축적할 필요성이 있음
- ☐ 대출심사의 경우 소상공인의 신용, 사업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신용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정량적인 정보와 함께 정성적인 정보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대출심사체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 사업평가, 리스크관리 능력 등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함
 - 무담보·무보증 직접대출이 필요한 기업은 심사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민간부문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월등한 심사능력과 고도의 리스크 관리기법이 요구됨
- ☐ 직접대출의 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저신용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등 대출의 질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확대도 요구됨

참고문헌

- 김흥기(2017), 소상공인 정책금융 혁신방안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형식, 이순호(201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정은애, 남윤형(2022),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중소기업 포커스
통계청(202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
한국은행(2022), 금융안정보고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2),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2022),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차산업혁명위원회(2015),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 마련
조혜정(2020), 전통시장비대면거래(온라인) 진출방안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kb지식비타민: 중소기업정책금융 구조와 이해
목정환(2018),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시사: 국내 핀테크 동향 금융
안정 리스크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박창균(2015), 서민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신탁연구
소상공인진흥원(2009),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보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2017), 소상공인금융실태조사보고서
우석진(2014), 정책금융 재원 재분배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종욱, 송치승, 김상준(2018), 혁신성장의 Econ 101과 Start-up 성장의 효과적인
금융생태계-혁신성장의 원리와 Start-up 금융,
한국경제포럼
한국금융연구원(2018),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
OECD(2016), New Approaches to SME and Entrepreneurship Financing:
Broadening the Range of Instruments